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2002. 10



KOPEC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의 한국위원회로서 PECC 결성 및 정부의 적극적인 태평양 외교 활동에 부흥하여 1981년 6월 조직되었다.

PECC는 정부, 학계, 업계의 3자 참여 원칙(Tripartite Participation)을 기본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것을 그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APEC의 유일한 민간 옵서버(observ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KOPEC은 국내 학계, 업계, 및 정부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여 PECC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표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국내외 연구 사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한국은 PECC 금융 포럼의 의장국으로서 (의장: 양수길 KOPEC 부회장) 역내 금융분야 연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주도하고 있다.

KOPEC의 초대 회장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 (1984-1993)로서 PECC 창립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김기환 대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 설립 당시 KOPEC은 한국개발연구원(KDI)내에 사무국을 두었으나 1991년 1월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아시아 태평양 협력 외교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240~3 FAX: 3460-1244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2002. 10

KOPEC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 언

현재 국제경제질서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유주의와 다자주의를 표방하던 국제무역제도가 쌍무협정의 확대, 지역주의와 보호주의 경향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과 전염 가능성이 여전히 국제금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채널인 APEC이 설립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를 단위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외교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있다.

특히 2003년 PBEC 총회와 2005년 APEC 회의 등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을 시험하는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태평양경제협력외교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정리와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국제협력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과 지역금융협력논의, ASEAN+3와 APEC, 기타 태평양지역 민간협력기구까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경제협력논의의 진행현황과 전망, 문제점을 총정리하여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협력외교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동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실무관료 및 학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의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 민간 및 학계의 정책 개발과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2년 10월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 **김 기 환**

목 차

Ⅰ.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동향과 한국의 입장 ····· 7

1. 한국관련 자유무역협정
   -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중장기 추진전략 ····· 정인교 / 9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생각한다 ····· 김병섭 / 29

2. 동아시아 금융협정
   - 동아시아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RFA)의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 윤덕룡 / 39
   - 동아시아 금융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강승모 / 61

3. ASEAN+3
   - ASEAN+3 협력체제 : ASEAN의 시각과 전략 ····· 권 율 / 71
   - ASEAN+3 전망 및 대응과제 ····· 김성인 / 99

II.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현황과 대응과제 …… 121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PEC과 한국 : 현황과 과제 …… 김상겸 / 123
·APEC의 향후 발전방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 지혜양 / 143

2. 아·태경제협력 민간부문 이니셔티브 :
ABAC, PBEC, PECC …… 이은석 / 155

Ⅰ.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동향과 한국의 입장

1. 한국관련 자유무역협정
·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중장기 추진전략 / 정인교
·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생각한다 / 김병섭

2. 동아시아 금융협정
· 동아시아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RFA)의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 윤덕룡
· 동아시아 금융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 강승모

3. ASEAN+3
· ASEAN+3 협력체제 : ASEAN의 시각과 전략 / 권 율
· ASEAN+3 전망 및 대응과제 / 김성인

한국의 FTA 추진배경과 중장기 추진전략*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Ⅰ. 서론
Ⅱ.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와 배경
Ⅲ. 우리나라의 FTA 정책
Ⅳ.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Ⅴ. 결론

Ⅰ. 서론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 2000년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

* 정인교(200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내용을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임.

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교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수출실적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수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전종식 이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범세계화와 지역주의가 양립하는 대외경제 환경에서 전략적 통상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나아가 통상제도를 투명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확대·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II.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와 배경

1. 지역무역협정의 정의

특혜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무역협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정하여 지역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상품분야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을 대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므로 포괄적인 정의가 필요하나 이 경우에도 상기 원칙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협상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기대되는 회원국간 시장접근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기서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방식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를 분류하고자 한다.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는 ① 회원국간 관세만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③ 관세동맹에다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등에서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⑤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경제통합 수준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대표적인 예로는 각각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들 수 있다. 경제공동체와 경제연합의 예는 유럽지역에서 체결되었던 협정들을 들 수 있는데,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1960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의 구주공동체(EC)와,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EU)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한 국가들은 어떤 형태의 협정을 추진하게 될까? 지금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을 분석하여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동맹(CU)에 비해 더 활발하게 체결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이 더 활성화되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국 각자가 무역정책과 역외국에 대한 관세에 있어 재량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관세동맹은 경제발전단계가 비교적 유사한 국가끼리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경제통합의 정도를 심화시킬 경우 관세동맹이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한편,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나,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이 선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9년에 발효된 미국·캐나다 간 FTA의 경우, 체약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데 가치를 두고, 적어도 단기간 내에 양국간 경제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에 체결된 EU·멕시코 간 FTA는 경제발전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멕시코로서는 EU 수준의 경제통합을 수용하기보다는 무역에 대한 각종 제약만을 제거하는 FTA를 선택하였다.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현황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지역적으로 차이가 큰 편인데, 현재 발효중인 협정의 50% 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다음으로는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은 지역무역협정의 대상국으로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이 지역 국가들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 1> 지역무역협정 현황

(2000년 7월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		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	
	FTA	CU	FTA	CU
갯수	148	24	6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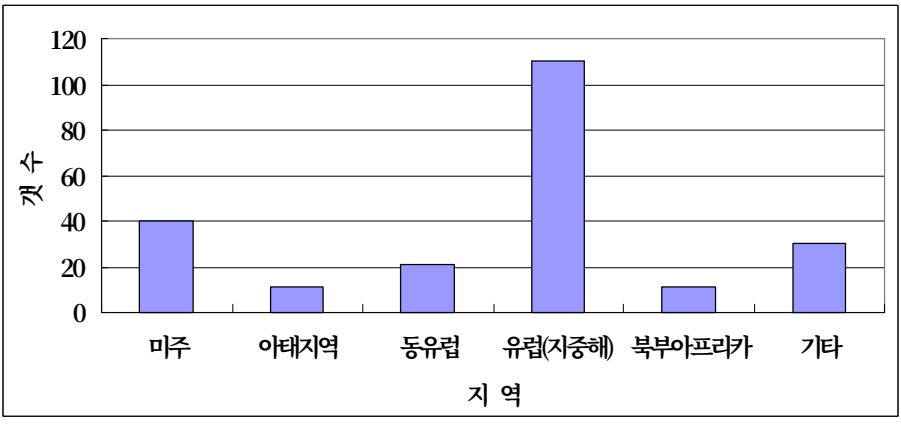
자료: WTO,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0.

무역상의 특혜를 주고받기 위해 체결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지역 국가들이다. 그러나 최

근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EPA)을 체결하였고, 한국은 칠레와 협정을 추진중이며, 중국은 2000년 11월 부르나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ASEAN 국가들과 FTA 추진의사를 밝힌 이후 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3국 중 일본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미 싱가포르와 협정을 타결하였고, 멕시코 및 칠레와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 호주와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ASEAN 국가들과도 FTA 체결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등 일본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그림 1>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별 체결 추이



지역무역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 불투명하였던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시 학자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줄어들 것으로 전

망하였으나 WTO 출범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오히려 확대·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2000년 7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70%인 172개 지역무역협정은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2배로 늘어났으며, 1997년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WTO 회원국 수를 초과했다. 또 WTO 회원국(EC를 1개 지역으로 가정)은 평균 5개의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의 원인

지역무역협정은 개별국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며, 특히 WTO와 같은 다자체제를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작은 개별국가가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직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급증하였는데, 이 시기는 WTO가 국제경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WTO로 인하여 개별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진 만큼 WTO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한 것은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외에 이해관계가 크면서 "뜻이 통하는(likely-minded)" 국가끼리의 무역자유화에도 협정체결국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 각국이 처한 정치·사회적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985년 체결된 미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능력을 제고하고 중동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정

치·경제적 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북미지역과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MERCOSUR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국가든지 자국의 다양한 기대와 이유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한다고 볼 때, 이를 어느 하나의 이유에 맞추어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는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급증세를 보였던 1970년대와는 달리, 1980년대에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잠시 주춤하더니 이후 1990년대 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였다. 수치를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10년 동안 총 9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된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한창 진행되었던 1990~94년의 5년 동안에는 무려 33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1990년대 전반에 지역무역협정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험정책"으로 설명하였다. 즉 지역무역협정은 기존 GATT 체제하의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정책" 차원에서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종료되고, 다자체제가 자리잡게 되면 각국은 지역무역협정보다는 다자체제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100여 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전략적으로 추구하여온 통상정책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지역무역협정 참여국들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왔고,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은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동안 다자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였던 미국이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Bhagwati). 한편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체제의 느슨한 규범이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자체제의 규범은 한번 채택되면 수정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에도 적용되는데, 50여 년 전에 지역무역협정을 규율하기 위해 채택된 규범인 GATT 제24조는 그동안 세계경제의 발전과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GATT 출범 당시 경제통합은 어쩌다 체결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만 인식하고, GATT 제24조를 다자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확산으로 인해 다자체제가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발휘할 수 없자,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GATT 제24조의 개정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CRTA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의 FTA 정책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과거 북미지역에서 NAFTA가 추진될 당시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나,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농산물 개방을 둘러싼 국내외 사정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책연구기관에서 FTA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FTA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

1998년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우

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공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추진하며, 주요 거점국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 거대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과 관련기관 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하여 양국 정상은 1999년 9월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12월 칠레 산티아고 제1차협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4차협상을 종료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15개 관계부처 및 10개 연구소, 단체의 실무자 130여 명을 5개 작업반 및 13개 세부분과로 소속시켜 협상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1년 이후 2002년 중반까지 양국은 시장개방안에 대한 이견과 칠레의 EU, 미국 등과의 FTA 협상으로 인한 빡빡한 일정 때문에 협상을 진행시키지 못했다. 양국 정상간 논의와 각료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2002년 지난 8월 제5차협상을 산티아고에서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서울에서 제6차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칠레와의 FTA 협상 외에도 우리나라는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과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99년에 시작된 일본과의 FTA 공동연구 결과는 2000년 5월과 9월에 각각 서

울, 동경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었다. 양국은 한·일 FTA 비지니스포럼을 결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양국간 FTA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2002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정부가 참여하는 산관학공동연구회를 결성, 양국간 FTA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2. 왜 FTA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정부의 개혁과 개방 정책 유지, ② 지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③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④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⑤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절감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특히 정부는 IMF 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BIT)의 체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FTA를 통해 회원국간 배타적 특혜무역을 추구한다는 점을 들어 FTA 체결을 폐쇄적인 무역정책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FTA 체결 자체가 개방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통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FTA는 주로 관세철폐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되는 협정은 관세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가장 선진화된 형태의 통상규범이 포함되므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적극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WTO, OECD 등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전세계 교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 과거 우리나라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심화되어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자체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 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와 같은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

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가 절실한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바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이 된다.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를 거점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국내시장규모와 투자제도의 완비가 중요하므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

FTA를 체결할 경우 확대된 역내시장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역내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된 사례로 NAFTA하의 멕시코를 들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논의가 시작된 1991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협정이 발효된 1994년 이후에도 FDI의 유입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멕시코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1990~1999)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유입액	2,549	4,742	4,393	6,715	10,973	9,526	9,186	12,831	10,238	11,23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0.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FTA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기존 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는 우방국가를 결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세력 형성이 절실하다. 특히 멕시코의 1994년 페소위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로부터 쉽게 지원과 협력을 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행정적인 절차나 분쟁해결 관련조항에 의해 회원국간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패널 등은 회원국들간의 관계개선과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에 적용되는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구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대치상황에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 의회 및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3. 칠레를 첫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정부가 1998년부터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자유로운 다자체제하에서 수출증진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우리나라가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일리가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다자체제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로 자처해온 미국이 이미 NAFTA를 결성하였고, 지난해 말에는 요르단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미주대륙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하는 FTAA도 추진중에 있다. 유럽은 지난 50년간 통합과정을 거쳐 현재 회원

국의 수가 15개에 이르고 있으며, EU를 동구, 지중해, 남미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역무역협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일본도 싱가포르와의 FTA를 연내에 타결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며, 칠레, 미국, 호주, 멕시코, ASEAN과의 FTA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 모두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도 다자체제를 지지하는 입장은 협정체결 전과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도 다자체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되 주요 교역국과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칠레가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멀고, 교역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칠레 선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칠레가 첫 FTA 상대국으로서 갖는 장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칠레를 택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면서,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거대경제권과 본격적으로 추진할 FTA를 대비해 미리 경험을 축적하자는 데 있다. 만약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다면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 경제가 지불해야 할 구조조정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FTA 추진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칠레는 이미 10여 개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칠레와의 FTA 협상을 통해서 FTA의 통상규범 설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 또 지리적으로 멀다는 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EU · MERCOSUR FTA에서 보듯이 원거리 국가간에도 FTA 체결 논의는 활발하다.

주요 교역국과 FTA를 추진함에 있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국가나 취약산업은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수산업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칠레와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 수준과 범위에 대해 농업인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정부는 우리 농업분야의 취약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칠레를 첫 FTA 체결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칠레가 쌀과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반면, 과수와 채소 위주의 농산물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이 우리나라와 반대인 관계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칠레의 농업 잠재성과 과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농업계에서 제기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농산물 시장양허안에서 상당수의 품목을 자유화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양국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최선의 대안은 취약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상대국이 높은 관심을 보일 경우 이를 완전 제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결국 상대국에게 관세철폐를 요청할 한국의 관심품목 수를 축소하거나, 한국의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화는 세계적 추세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취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취약산업은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는 다자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회원국의 경제적 손실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지역무역협정은 세계화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내수시장

규모, 교역비중 및 구조, 교역장벽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등 주요 교역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FTA 대상국으로 일본과 미국이 가장 유망하고, 다음으로는 중국, EU, ASEAN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내수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이 가장 유망한 FTA 상대국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10~20년 후를 고려하면 중국도 유망한 대상국가가 될 전망이다. 교역비중 및 보완성 면에서는 일본, 중국과 미국이 가장 유망한 FTA 상대국으로 나타났으며, EU는 내수시장, 교역의 보완성, 민감분야에서는 유리하나, 무역장벽 자체가 낮고, 제조업계의 관심이 낮아서 FTA 체결 대상국으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감분야가 가장 낮고, 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FTA를 추진하기가 쉽고, 또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4개 지역은 모두 농산물 수출국이므로 FTA 체결을 추진할 때 고충이 클 수 있다. 무역장벽에서는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은 특히 비관세장벽이 높아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규정을 포함한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對일본 수출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외견상 EU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EU가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이 낮을 것이란 점으로 미루어볼 때, EU와의 FTA 추진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단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인접국으로서의 신뢰도 문제가,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재가 FTA를 방해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데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

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미국, ASEAN과도 논의를 활성화시키며, 중기적으로는 중국과의 FTA 체결과 동북아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U와의 FTA는 EU의 對아시아 통상정책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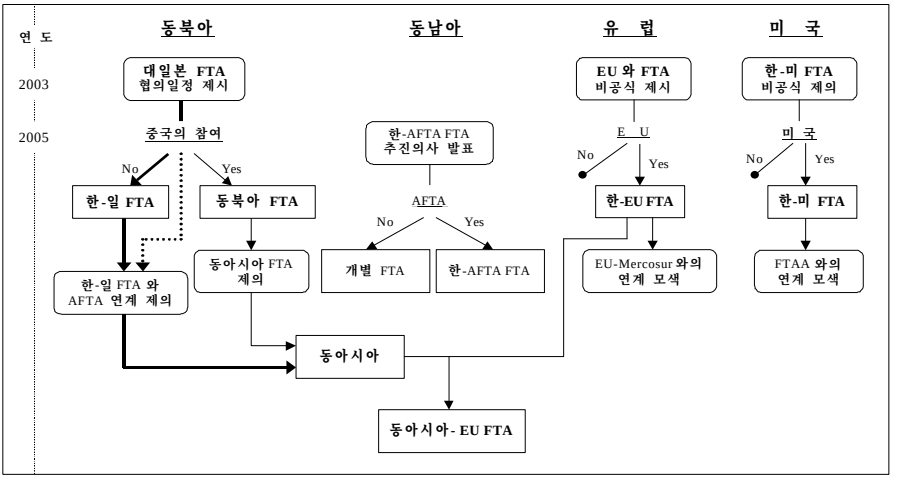
FTA 추진, 특히 5대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는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지역)에 따라 짧게는 2~3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더라도,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발전과 발맞추어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지난 몇 년 사이 경제통합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1980년대 말 제안된 적이 있으나, 미국과 EU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은 동아시아 FTA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금년도 ASEAN+3 정상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FTA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FTA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과의 쌍무간 FTA를 착실히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hub countr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FTA를 동아시아 FTA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일본과의 FTA는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큰 틀에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간 FTA는 동북아 3국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변수와 별도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최근 중국도 ASEAN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금년말 WTO에 가입하게 되면 시장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므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FTA를 추진할 때는 중국을 포함한 FTA 추진전략을 먼저 설정한 상태에서, 여건이 나은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중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 전략



<그림 2>는 거대경제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밀분석하고,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

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양자간 투자협정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체결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들 협정들은 포괄적인 FTA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협정 타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부터 양국간 협상범위, 기본원칙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 일정을 제시하고, 정부의 FTA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FTA 정책의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는 미국과 유럽과의 FTA 추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비공식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일 FTA는 정부간 협의단계에서 중국이 동 FTA에 적당한 조건 아래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5년은 FTA 정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자유화를 상당 부분 이행(제조업종 관세인하의 99.3% 이행)함으로써, WTO 가입의 부정적인 요소를 흡수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할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FTAA가 출범되어, 미국이 미주지역 외에 다른 지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지역의 AFTA가 회원국간 자유화를 완료함에 따라 내부문제보다는 AFTA의 역외확대 논의를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년을 전후하여 상대국과 사전에 조율한 후 미국, ASEAN, EU 등과 FTA를 추진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 중 ASEAN과는 동북아 FTA를 달성한 후 공식적으로 FTA를 제의하는 방안과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한·AFTA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2005년 시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반응 여부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개별지역과의 FTA도 필요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다.

V. 결론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 실익이 큰 주요 거대경제권과는 FTA 체결 방침을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FTA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FTA 정책의 필요성과 장단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한 한·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 FTA 추진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분야의 경우 우리 측의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혼선되는 등 업무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FTA 담당자를 장기근무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통상제도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FTA 체결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취약산업의 반발, 국내 구조조정 문제 등 제약요인과 경제적 당위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추구하되, FTA와 DDA 등에서의 자유화로 인해 농업과 같은 취약산업이 입는 피해의 보상을 위한 기금을 매년 적립하는 법 제정과 함께 합리적인 보상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생각한다

김 병 섭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목 차

Ⅰ. 머리말
Ⅱ. 왜 칠레인가?
Ⅲ. 칠레와의 협상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오늘날 지역경제통합 추세는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47년간 GATT에 통보된 지역협정이 250건인 데 비해 1995년부터 2002년 3월 말까지 7년여 기간 동안 똑같은 숫자의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가히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지역통합의 합종연횡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WTO는 그러한 결과로 현재 43% 수준인 세계총무역 중 지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2005년에는 51%에 달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협정은 여러 변용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역외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역내회원국들이 무역전환의 이익을 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점점 가시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1>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02년 3월 말 기준)

	GATT	WTO	계
ㅇ통보된 RTA 기준	125	125	250
- 현재 유효 RTA	(51)	(117)	(168)
- 기존협정 가입 및 서비스 대상 RTA 제외시			(141)
ㅇ통보+미통보 기준			
- 현재 유효 RTA			243

*자료: WTO.

이러한 배경 아래서 지역경제통합 추세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어느 국가에게나 통상정책의 핵심아젠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칠레와의 예비적 논의를 거쳐 1999년 12월 공식협상을 개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으로 머물러 있고, 국내에서는 칠레를 첫 FTA 추진상대국으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점점 더 국제적인 경제통합 움직임으로부터 소외되어 지역주의의 미아가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한·칠레 FTA야말로 시급히 타결지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하게 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한·칠레

FTA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분석함으로서 정부에서 왜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FTA 체결로 인한 위협이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앞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지 않을 때 우리의 통상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를 전망해 보기로 한다.

II. 왜 칠레인가?

우리나라의 FTA 정책에 관해서는 1998년 11월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첫째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둘째 칠레와 유사한 소규모 국가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후 관계부처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주요국인 미국, 일본 및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은 정밀 검토 후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시에 비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칠레를 첫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배경은 4년이 되어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기로 한다.

1. 칠레 시장의 중요성

전체적으로 볼 때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이다. 칠레는 (1998년 기준으로) 총인구 14.8백만 명으로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 GDP규모 총 762억 불로서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이며, 1인당 GDP는 5,139불에 이르는 등 꽤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총교역액은 2000년 349억 불로서 세계 제40위권이다. 즉 서로 큰 이익을 교환할

수 있는 주요한 교역상대국은 아니나 FTA의 경제적 효과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소국은 아닌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칠레와의 FTA 체결시 연간 9.6억 불의 후생증가, GDP 0.01% 증가, 4억 불의 무역수지 개선(수출 6.6억 불, 수입 2.6억 불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상국 선정단계에서 판단의 상당부분을 FTA의 경제적 효과 등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관세철폐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정태적 효과뿐 아니라 동태적 효과,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외교안보적인 효과로 좀더 우리의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FTA는 상품, 서비스, 인력뿐 아니라 지식과 정보와 기술, 심지어 경제운용의 경험이 활발히 교류되고, 나아가서 동반국가의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바탕이 되는 데 이는 그 어떤 협력관계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칠레의 연장선상에서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1년 기준으로 수출이 93.6억 불로서 전체 수출의 6.5%, 수입이 32.6억 불로서 전체수입의 2.4%에 불과하지만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61.6억 불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로 보아 매우 주요한 중남미 시장이지만 첫 FTA 대상국으로서 당장 칠레만큼 유망한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이러한 발전은 칠레가 1970년대 초 남미 국가 중 가장 먼저 수입대체형 발전전략을 포기하고 동아시아형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한 결과인데, 이로 인해 1991~1997간 GDP성장률은 남미 국가로는 경이적인 수준인 8%에 달하였다. GDP규모와 대비한 FDI유입액이 세계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수준 높은 경제운용 성적표가 가져다준

장학금이라 할만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경제정책기조를 가진 국가라면 FTA 파트너로서 교류협력분야도 넓고 그 과실도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장인 칠레는 이미 8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EU 등 14개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일본, 중국 등과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남미 FTA 네트워크의 중심축(hub)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6일 미국의 TPA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칠레 간 FTA협상은 연말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칠레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해 FTA 체결이 불가결하며, 칠레를 축으로 하는 FTA 네트워크에 진입하지 못하는 국가는 수출시장에서 서서히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칠레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 칠레를 대중남미지역 수출 및 투자진출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위협

우리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수입측면만 본다면 FTA가 체결되더라도 가격에 비탄력적인 원·부자재의 성격상 급격한 수입 증가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칠레 교역은 수출 약 5만 7,300만 불, 수입 약 6만 9,600만 불로서 외형적으로 약 1만 2,4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목재, 광석 등 어차피 어디로부터든 우리 경제가 수입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교역의 내용과 방향에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상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FTA 체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일반의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점이 칠레를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중 하나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칠레는 케언즈그룹의 일원으로서 1960년대에 소규모의 사과 수출국이었으나 이제 세계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가 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1980년대에 과실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난 끝에 이제 안정화되는 단계이나 EU 및 아시아 국가와 FTA가 체결되면 좀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칠레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다. 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우리나라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이다. 우리 시각에서 개별국가의 특성과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FTA 대상국을 판단할 뿐 케언즈그룹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기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머나먼 지리적 위치, 우리와 반대되는 계절 등도 칠레 측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으로서 아무리 저장기술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희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우리 농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온 협상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과 관련, FTA는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주변국가들간에 체결해야 이익이 큰데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이며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칠레와의 FTA는 그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끼리의 FTA 체결 효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체제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모델의 FTA는 그러한 재편의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큰 조정비용을 불가피하게 수반한다. 정부는 이와 같이 상반되는 성격을 종합 감안한 결과 FTA 추진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FTA의 긍정적인 효과만을 고려하여 산업구조가 경쟁적인 국가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하기보다는 FTA의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중소국가인 칠레와의 FTA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

이런 중요성을 가진 칠레와 중남미 국가들이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보호주의적 조치는 자연히 역외국을 겨냥할 것이다. 그 경우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망은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의 총 반덤핑 피소 국가를 분석한 자료로도 뒷받침된다. 즉 중국이 254건, 한국이 135건, 대만과 미국이 각 93건, 인니 73건 등 다수 반덤핑피소 국가는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특히 완제품 위주여서 완제품과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자본재수입을 장려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변화된 수입정책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칠레 공산품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수출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현재의 상황만을 감안한 단견이라 할 것이다. FTA는 우리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앞서 말한 대로 칠레는 광범위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칠레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칠레와의 협상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칠레와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가진 후 대내외 요인이 겹쳐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 EU, EFTA 등과 동시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칠레 측 내부사정도 물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큰 농업부문의 반발을 의식하여 다수의 예외품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측의 좁은 협상입지 문제가 겹쳐진 결과다. 많은 국제협상이 그렇듯이 한·칠레 FTA도 기본적으로 양면 게임의 성격이 있다. 정부에서는 칠레와의 협상 못지않게 국내 이익단체들의 반발을 경청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8월 산티아고에서 벌어졌던 제5차 협상을 계기로 1년 8개월여 동안지연되어왔던 협상이 일단 재개되었다. 교착의 원인이 되어왔던 양허안(관세인하스케줄)에 대해 합의에 이르고, 협정문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 타결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주요 교역국과 FTA를 하나도 체결하지 못한 '통상한국'은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이다. 우리 사회에는 FTA를 둘러싸고 아직도 이러한 적극적인 시각과 농업부문의 반대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한·칠레 FTA는 한국 사회가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현명하게 수렴하여 전체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고있다. 결국 한·칠레 FTA는 그 출발이 어떠하였든 더 큰 교역국과의 본격적인 FTA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의미도 크다. 한국이 칠레 이외의 다른 나라와

FTA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첫 시험을 통과한 연후에나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가 시사하는 것은 우리도 이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무역국가로서 존재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칠레가 한국과의 FTA 체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FTA를 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하며, FTA의 득실을 검토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추세에 뒤쳐질 때 치러야 할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FTA 추진을 비롯하여 모든 정책결정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마련이며, 최종선택은 결국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양국간 FTA의 이익과 부담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전체적인 이익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여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선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상의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면서 큰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적인 FTA 추진 대상국은 현실세계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와 함께 시대조류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첫 선택은 중소규모 국가와의 조그만 출발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그 초기 체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주변정세를 관망해가면서 체결범위를 넓혀가는 점진적 접근방식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FTA가 첫 걸음부터 큰 이익을 추구하여 우리의 무슨 분야 이익을 걸고 한 번 해보는 모험이 되어서도 곤란하다. 이렇게 볼 때 칠레는 이상적인 대상국이라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나온 불가피한 차선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

FTA는 특정 정권의 치적의 하나로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정권의 임기와는 상관없이 통상한국의 미래를 위해 하나씩 신중하게 이루어가야 할 사업이다. 무엇보다 3~4년을 끌어오고 있는 장기 미결과제인 한·칠레 FTA를 국내상황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시아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RFA)의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과제

윤 덕 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Ⅰ. 동아시아 RFA 추진현황 : Regional 유동성 지원장치의 도입
Ⅱ. 치앙마이 구상(CMI : Chiang Mai Initiative)의 진행상황
Ⅲ. 동아시아 통화스왑협정에 대한 평가
Ⅳ. 동아시아 RFA의 추진방향
Ⅴ. 한국의 대응과제

Ⅰ. 동아시아 RFA 추진현황 : Regional 유동성 지원장치의 도입

1. 필요성

역내경제협력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동아시가 국가들이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계기는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다.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대되어 직접적인 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까지 경

제적 불안을 피할 수 없었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도 독자적인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국가들이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아시아 역내의 금융시스템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의 자구적(self-help) 유동성 지원장치의 설치 및 이를 운용하는 독자적인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공식적 및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2. 경과과정

역내금융 협력을 위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로 유동성 지원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대표적인 대안들은 아래와 같다.

- 아시아 통화기금(AMF : Asian Monetary Fund)구상: 이 구상은 일본의 주도로 제시된 대안으로, 역내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통화기금(AMF : Asian Monetary Fund)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기금의 설립에 필요한 기초자금은 일본이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본의 이 제안은 역내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유럽 등의 급격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역내에서도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태도와 역사적인 부담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에 대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품고 있는 회의와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인하여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 : 이 대안은 1998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임원회의(EMEAP)에서 한、중、일 등 아시아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은 아시아 각국이 일본 국채를 담보로 일본중앙은행에서

긴급엔화자금을 융자받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11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합의에 이른다. 이 합의는 엔화의 국제화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아시아 각국의 긴급외환확보에 대한 희망이 서로 합치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규모가 얼마되지 않고 이 제도의 활용을 위해 일본의 국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도입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3. ASEAN+3의 금융협력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이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내용이 공동성명으로 발표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ASEAN+3 포럼에 참가하는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은 금융、통화 등 거시분야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를 비롯하여 역내 독자적인 유동성 지원장치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 큰 틀을 제시하고 폐막하였다.

· 2000년 5월에는 마닐라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태국 치앙마이에서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은 동아시아지역의 유동성 지원장치로서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를 치앙마이 구상(CMI : Chiang Mai Initiative)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참고 : 일본의 엔국제화 노력>

1997년 말 : AMF 제안
1998년 4월 : 외환법 재개정으로 내외자본거래 및 외환매매 자유화
1998년 10월 6~8일 : 미야자와 플랜발표. IMF-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IMF 체제와 그 지원프로그램을 비판하며 아시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쌍무적 자금지원계획 발표.

II. 치앙마이 구상(CMI : Chiang Mai Initiative)의 진행상황

1. CMI의 목적

치앙마이 구상(CMI : Chiang Mai Initiative)은 동아시아 차원의 유동성 지원장치를 강화·구비함으로써 역내에서 외환위기의 징후가 보이는 국가에 대해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MI에서의 유동성 지원장치는 현재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ASEAN 국가간의 유동성 지원장치이다. 이는 기존의 ASEAN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이 1977년에 도입하였던 통화스왑협정을 ASEAN 10개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 운용자금의 규모는 총 10억 달러로 결정되었고 2000년 11월 17일자로 발효되었다. 다른 하나는 ASEAN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 포함된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을 기본방식으로 ASEAN+3개국간 유동성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현재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의 체결이 역내 국가들간 활발히 진행되는 중에 있다.

2. CMI의 현황

CMI는 2002년 6월말 현재 총 8건의 양자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한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간 6건의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결성된 각 국가들간 통화스왑협정이 보여주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 : 일본은 이미 통화스왑협정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협정을 보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간에는 새 협정을 체결하여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했다. 한·일 간에는 미야자와 구상의 일환으로 1999년 4월에 체결되었던 50억 달러 규모의 스왑협정을 확대하여 20억 달러의 추가적인 달러-원 신규스왑협정을 2001년 7월 4일에 체결하였다. 일본과 말레이시아 간에는 기존의 약정액 25억 달러에 추가하여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링깃 스왑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과 태국사이에는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억 달러의 달러-바트 스왑협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중국에 대해서도 같은 규모로 체결을 완료하였다. 일본과 필리핀사이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페소-달러화 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이 체결한 통화스왑협정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해 일본이 자금의 공여자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상국들은 수혜자인 one-way 형식을 취하고 있다.
- 한국의 양자간 통화 스왑협정 : 한국이 각국과 체결한 통화스왑협정은 아래와 같다. 중국과는 20억 달러 규모의 원-위안화 통화스왑을 체결하였으며 달러화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two-way 형식을 취하였다. 태국과는 10억 달러 규모의 로컬통화-달러의 two-way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10억 달러 규모의 로컬통화-달러의 two-way 통화스왑에 대해 협상중이나 주요 내용은 이미 합의에 도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지원을 상정한 two-way 형식의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는 특징을 보였다.

· 중국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 : 중국은 한국, 일본과는 상호지원형식을 취하여 계약상 상호대칭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태국과는 20억 달러 규모의 바트-달러 통화스왑을 one-way로 체결하여 자금공여국의 입장에서 계약을 완료하였다.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지금까지 CMI합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의 진척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치앙마이 합의의 진척상황

	지원통화	합의일	규모	지원형식
일본-한국	달러/원	2001. 7. 4	70억 달러(a)	one-way
일본-중국	엔/위안	2002. 3. 28	30억 달러	two-way
일본-태국	달러/바트	2001. 7. 28	30억 달러	one-way
일본-필리핀	달러/페소	2001. 8. 30	30억 달러	one-way
일본-말레이시아	달러/링깃	2001. 10. 5	35억 달러(a)	one-way
중국-태국	달러/바트	2001. 12. 6	20억 달러	one-way
한국-중국	원/위안, 혹은 달러	2002. 6. 24	20억 달러	two-way
한국-태국	달러/로컬	2001. 6. 25	10억 달러	two-way
한국-필리핀	달러/로컬	주요 내용 합의	10억 달러	two-way
한국-말레이시아	달러/로컬	주요 내용 합의	10억 달러	two-way
일본-싱가포르		실무협의중		
일본-인도네시아		실무협의중		
중국-필리핀		실무협의중		
중국-말레이시아		실무협의중		

주: (a) 여기에 표시된 금액규모는 신 미야자와 구상에서 제안된 한국에 대한 50억 달러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25억 달러가 포함된 것임.

3. 유동성 지원의 원칙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은 기본적으로 당사국간 협상에 따라 대상통화와 약정규모가 결정되지만 유동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첫째, 통화스왑협정은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자금지원은 자금공여국의 협의에 기초하여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며,

셋째, 자금지원은 IMF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확정되었거나, 자금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결정되어 있다. 단, 약정금액의 10%까지는 IMF로부터의 자금지원과 연계하지 않고 자금공여국이 지원할 수 있다.

III. 동아시아 통화스왑협정에 대한 평가

동아시아 국가들간 도입된 통화스왑협정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결부되어 있다.

1. 긍정적 측면

현재 도입된 동아시아 통화스왑협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역내금융협력의 도입을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러 차례 금융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그동안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으로써 치앙마이 구상을 통해 금융협력이 현실화 되었다. 치앙마이 구상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다자가 참여하는 유동성 지원장치를 구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역내 금융협력의 큰 획을 긋는 진일보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금융협력을 위한 주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이 당사국간에 의해서만 발동되지 않고 다자적으로 발동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자협력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치앙마이 구상은 비록 양자간 통화스왑이 기초적인 협력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양자간 협력이 다자간 협력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므로 동아시아지역에서 금융분야 최초의 다자간 금융협력이 그 틀을 갖추게 되었다.

2. 부정적 측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앙마이 구상을 바탕으로 한 금융협력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CMI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아시아 유동성 지원방식은 독자적인 자금지원 장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IMF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IMF로부터의 자금지원에 부속적인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재 지원되는 유동성의 10%로 되어 있는 IMF 자금 비연계 부분에 대해 향후 3년마다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의 원칙을 개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연계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ASEAN 통화스왑협정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ASEAN+3간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은 대부분 일본이 자금공여국의 입장에 서고 나머지 국가들이 수혜자가 되는 비대칭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지원관계가 양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불안정성과 종속성의 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ASEAN+3간의 통화스왑협정이 그 규모 면에서 기존 ASEAN 국가들간의 스왑협정을 압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방적 지원관계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대다수의 ASEAN 후발가맹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의 경우 제도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탓으로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SEAN 통화스왑협정을 통해서만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동아시아의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는 그 포괄대상이 되는 국가의 범위에 있어서 이원적이고 불완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넷째, 현재의 양자간 통화스왑 구도는 개별국가간 제공할 수 있는 유동성의 지원한도가 결정되어 있다. 결정된 지원한도가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국제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이동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었고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동성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유동성 위기가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투기자본들은 통화스왑의 지원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역내 유동성 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염될 경우 쌍무적 유동성 지원협정이 가동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97년의 경제위기시에 경험한 바와 같이 역내 국가의 경제위기는 경제적 상호연관성이 높은 역내 다른 국가들로 쉽게 전달이 된다. 따라서 위기발생시 여러 역내국가가 동시에 위기에 처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쌍무적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상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치앙마이 구상은 동아시아 역내의 금융협력을 위한 시발점으로 의미를 갖지만, 역외국의 반대와 역내국간 경제력 및 경제발전의 격차를 감안하여 정치적으로 타협된 불완전한 형태의 유동성 지원장치라고 할 수 있다.

IV. 동아시아 RFA의 추진방향

1.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의 필요성

CMI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금융협력 구상이긴 하나 이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된 형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왜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통화 및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동성 부족에 대한 안전장치 : 유동성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협력방안에는 몇 가지 방향의 대안이 존재한다.

- 하나는 유동성 공급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예를 들면 유럽이 전후 국제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불동맹"을 설립한 것이나 현재의 협력형태인 CMI가 그 사례가 될 것이다.
- 다른 방안은 필요한 국제유동성의 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역내국가간 교역은 역내통화로 결제하거나 혹은 청산결제와 같이 장부거래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역외환율 불안의 파급효과 방지 :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불안정은 주로 엔-달러환율의 불안정에서 야기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경제가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점차 동아시아 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과 상호경합도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으로써 엔-달러 환율변동에 대한 경제의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 엔-달러 환율의 불안정이 엔-아시아통화간의 환율불안의 원인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엔-달러환율의 불안정이 역내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역내국가들간의 협력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아시아지역의 독자적 성장 잠재력 확대 : 지금까지 아시아 각국들은 주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여왔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출대상국은 주로 미국 및 선진국 국가들이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성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미국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국제거래는 현실적으로 교역시장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성장이 1%에 이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1.5%가 될 정도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성장 1%가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0.4%에 불과하였으며 최근에는 0.3%까지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Kwan, 1994, p. 3). 오히려 아시아 시장은 미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변신하여 미국의 경제성장에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시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미국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거래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역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정책은 더욱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아시아 시장 내의 교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현실적인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전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교역규모는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교역규모를 능가하고 있어서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지속성장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증가는 아시아의 역내성장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시장을

활성화하고 역내시장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성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화폐분야에서 거래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역내 금융 및 화폐협력을 통해 환율변동 위험의 감소, 거래비용의 감소, 유동성에 의한 거래제약의 탈피 등을 유도하여 역내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제 금융구조에서 아시아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응블록의 필요성 : 지금까지 국제 금융시장구조는 미국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를 공동의 단일통화로 도입하면서 세계의 금융구조가 크게 달라질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는 지역의 경제 및 인구규모를 보면 충분히 달러화를 주통화로 사용하는 지역의 규모에 필적하고 있어서 향후 세계금융시장은 미국달러화와 유로화의 양대 통화권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양대 통화가 씨뇨리지 획득을 위해 경합을 하건 아니면 타협을 통해 통화권을 분리하건 아시아지역의 통화들과 금융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양대 통화권이 형성하는 새로운 시장구조는 해당통화권의 이득만을 고려한 benign neglect 정책을 펴고 아시아지역의 이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G7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일본 엔화가치의 등락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함께 등락하는 상황은 향후 양대 통화권이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에 미칠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 재편되는 국제금융질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이득을 반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도 공동의 통화권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동통화권의 형성을 위해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은 필수적 전제가 된다.

2. 동아시아 통화 및 금융협력 방향

향후 동아시아의 통화 및 금융협력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과 장기적으로 통화공동체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협력방향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은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역내통화 결제협정, 금융감독의 강화 등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긴급유동성 공급 협정은 지역적 차원에서 역내 국가의 긴급유동성 필요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위기를 방지하는 것으로 CMI나 미야자와 플랜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긴급유동성의 공급은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는 역내 통화 중 발권력에 의해 지지되지 않은 경우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역내공동통화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이다.

역내 통화를 이용한 결제협정으로 상호간의 교역을 증대하고 달러화와 같은 국제통화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역내통화를 이용한 결제제도가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역내통화의 태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역내 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호거래로 인한 비용초래가 역내경제교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간 단기금융협력은 서로 이 제도를 악이용하지 않고 금융분야에 대한 건전성을 상호신뢰할 수 있도록 역내 금융감독 시스템의 도입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의 금융위기가 역내 국가들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전적 조기경보를 위한 감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의 자본이동에 대해 적절한 감시수단의 확보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단기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방안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단기유동성 지원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통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기적 비전

통화공동체는 장기적으로 역내국가들의 경제권이 상호통합될 것을 전제로 한 협력이다. 특히 통화공동체의 결성은 회원국들의 독자적인 금융정책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통합의 이득이 그 비용보다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통화공동체에 참여할 국가들을 결정하는 최적통화권의 범위, 기축통화 선정, 환율제도의 선택 등 기본적인 이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최적통화권의 범위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전체가 참여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전체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여건의 미성숙에 따른 회원국간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경로 접근법(multi-track approach)"을 통해 단계적으로 여건이 성숙한 국가들부터 통합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축통화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제안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달러-유로-엔화를 조합한 통화바스켓, 새로운 아시아의 공동통화(ACU : Asian Currency Unit)도입, 일본 엔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역내환율의 안정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권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내통화가 기축통화로 되어야 하며 참여국들의 정치적 명분을 고려하면 형태 면에서는 유럽에서의 EURO와 유사한 형식의 아시아공동통화로서 ACU화 도입이 바람직할 것이다.

환율제도 형태는 초기에는 EMS에서와 같이 역내환율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목표환율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심리적 완충기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고정환율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단기신용제공을 위한 차입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아시아의 통화 금융협력 여건

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통화통합의 조건성숙을 판단하는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이론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통화통합이나 공동환율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되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생산요소의 이동, 역내무역 비중, 경제의 상호개방정도 등에서 유럽의 수준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결과로 Taguchi(1994), Kwan(1998), Eichengreen and Bayoumi(1999), Wyplosz(2001) 등이 있다.

<표 2>는 Rhee and Moon(2002)에서 제시한 통화통합 여건판단의 자료로 역시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개방도나 역내교역 비중 면에서는 EU에는 못 미치나 NAFTA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gravity 모형을 이용한 역내 경제간의 상호연관성 지수는 여타 지역보다 훨씬 강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표 2> 주요 지역의 개방도 및 역내무역비중, 중력비율

	개방도	역내교역 비중	중력비율*
East Asia	42.5	51.0	4.45
EU	57.1	61.3	0.87
NAFTA	26.1	46.1	0.58

* 중력비율은 Gravity 모형을 활용하여 거리 및 경제교류의 관계를 정규화한 것으로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 교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을 의미함.

자료: Rhee & Moon(2002).

위와 같은 결과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이므로 아시아에서 경제 및 화폐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여건은 유럽이 EMS를 출발하던

당시보다 오히려 앞설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현재 자유무역지대를 도입한 NAFTA와의 비교에서는 월등히 앞선 조건을 보이므로 경제통합 및 통화통합의 추구가 무리한 시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통화협력이나 금융분야 협력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의 제한이 가장 우선된 이유인 것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이유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 : 일본은 아시아를 엔화통화권으로 통합하기를 원하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력이 향상되면 홍콩,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지역까지 위안화 경제권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일본 주도의 통화 및 금융협력을 지연시키길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아시아의 경제력 1, 2위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를 자국통화권으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통화협력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인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외부국가 특히 미국의 반대 : 현재 실질적으로 달러화 경제권인 아시아지역이 역내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협력을 시행할 경우 미국은 경제적 영향력의 저하와 씨뇨리지 이득의 상실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이나 통합노력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 통화협력을 주도할 국가는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경제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하나 일본은 경제력은 있으나 엔화의 국제화에만 관심을 보일 뿐 통화협력에 필요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자국의 이해관계만 고려하여 자본을 회수한 일본의 태도 등이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시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자제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를 배려하는 지도력을 보였으나 아직 경제력이나 경제제도 면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실력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환율안정의 모색, 유동성 지원장치의 확충,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체제의 구축, 참여국간 구속력을 갖는 협력체제 구축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인 합의와 협력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V. 한국의 대응과제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및 통화협력과 관련하여 맞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입장의 정리이다. 한국은 경제력 면에서 동아시아의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력 제3위의 국가로서 일본과 중국의 대립구도를 중재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며 역내 금융 및 화폐협력 움직임에 대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한 입장정리가 우선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중국의 경제 및 통화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기 전에 일본 통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엔의 국제화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화교경제권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지역, 이미 중국영토로 회복된 홍콩,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와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만 경제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나면 동아시아 경제가 현실적으로(de fac-

to) 위안화 중심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가 아시아의 중심통화로 자리잡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급히 아시아지역의 통화협력에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이 RFA에 대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목표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되어야 정책과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선행하여 가지기보다는 주변국의 변화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전략을 개발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현실을 수용하는 자세로는 한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유럽에서는 1970년대 초, 강대국들이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통합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약소국인 벨기에 총리가 소위 베르너-리포트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화통합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실제 통화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도 조속히 정책적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필요한 전략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역내 금융 및 통화통합은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질 목표이므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자유화의 진전은 대규모 자본이동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한국과 같은 소규모 경제로는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역내 다른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전염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역내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화통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역내 국가들간의 다양한 FTA의 진척이다. 현재 아시아에서도 양자적、다자적 FTA도입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FTA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가 그 효과를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으려면 역내통화간의 환율안정성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

라서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호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역내 경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역내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역내환율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국이 장기적으로 통화통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내협력의 제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경제통합을 달성하고 단일통화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을 주도하고 관련된 합의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는 기구가 제도화되었던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예를 들어 EC Commission은 유럽의 통합과 이 기구의 존속여부가 결부된 조직이어서 유럽의 경제 및 화폐통합을 위한 비전제시와 단계별 실천방안 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개선해왔다. 이것이 회원국들이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 주요 동력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경제 및 화폐분야 협력이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다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호이해를 조절해줄 수 있는 협력의 주도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협력 기구의 한국 유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서 금융협력이 제도화될 경우 그 기구를 자국에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모든 국가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 이 기구를 유치할 경우 상호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을뿐더러 독주에 따르는 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아예 여타 국가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상호이해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금융제도 면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IMF가 요구하는 대부분의 개혁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금융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점도 한국이 금융협력기구를 유치하는 데 당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섯째, 한국에서 Werner Plan과 같은 통화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거나 관련된 여러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입장정리와 전략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협력에 관련된 연구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역내에서의 금융 및 통화협력에 관한 주요 주제들에 대해 연구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결과는 일본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것과 다른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고,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Apel, E., 1998,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1958-2002, Routlege.

Eichengreen, B. and T. Bayoumi(1999), "Is Asia an Optimum Currency Area? Can it become one? Regional, Glob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Asian Monetary Relations," in S. Collignon and J. Pisani-Ferry(eds.), *Exchange Rate Policies in Emerging Asian Countri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London: Routledge.

Kaplan, J., and G. Schleiminger, 1989, *The European Payment Union,*

Clarendon Press, Oxford.

Kim, T., J. Ryou and Y. Wang, 2000,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e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wan, C.H.(1998), "The Theory of Optimum Currency Areas an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Yen Bloc in Asia," *mimeo*, Nomura Research Institute.

Moon, Woosik, and Yeongseop Rhee, 2002, Asian Monetary Cooperation : Ideas past and for the Future. Presented at the KIEP Expert Workshop, May 2002.

Taguchi, H.(1994),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apanese Yen," in Takatoshi Ito and Anne O. Krueger (eds.), *Macroeconomic Linkage: Savings, Exchange Rates and Capital Flow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yplosz, C., 2001, "Regional Arrangements: Some Lessons from Postwar Europe" paper prepared for FONDAD conference, held in Prague on June 21-22, 2001.

동아시아 금융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강 승 모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추진현황
Ⅲ. 향후 추진방향
<참고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추진현황
<참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추진일지

Ⅰ. 추진배경

1997년 6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인근 동남아 국가 및 우리나라에까지 순식간에 전파되어 동아시아지역 경제전체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동아시아 위기는 위기국가들의 구조적인 취약성, 비합리적인 경제정책 운영, 부적절한 대외유동성 관리, 그리고 단기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재발 방지 및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정책 및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과 함께 지역차원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었다. 특히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통합으로 인해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이웃국가로 빠르게 전염(contagion)되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자국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각국이 평상시에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서로 감시하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 지원해주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II. 추진현황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① 역내 위기시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과, ② 위기의 사전예방능력 제고를 위한 경제동향 점검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Chiang Mai Initiative) 출범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직후 일본은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아시아 역내국가간 통화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역내에서의 독자적인 Fund 설립은 IMF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금융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고, 위기국가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미국 등 일부 선진국과 IMF의 반대로 인해 AMF 설립 논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는바, 1999년 11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역내 자구 및 지원메커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구축 등 역내 통화·금융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중·일 3국의 정책당국간 협력이 시작되고, ASEAN 국가들과의 대화도 시작됨에 따라 ASEAN+3 차원의 금융협력 채널이 본격 가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소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라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CMI는 ASEAN+3 각국 중앙은행간에 상대국의 외환위기시 약정금액을 지원하는 양자간 통화스왑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1] 네트워크 구축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 11월 기존의 ASEAN 5개국간(말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니)의 다자간 Swap Arrangement가 10개국의 ASEAN 전 국가로 확대되었고, 금액도 2억 불에서 10억 불로 증액되었다.

CMI 체제하의 양자간 스왑협정은 IMF 등 기존의 국제자금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제수지 지원 또는 단기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역내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 협정은 지원요청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원국가들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국들 중 조정국(Coordinator)이 지명되어 협의과정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별 스왑계약의 최대인출액은 양자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자금지원은 ① IMF 자금지원과 같이 제공되거나, ② IMF 자금지원이 조만간(in the very near future) 이루어질 상당수준의 확실성이 있는 경우 제공되며, 다만 최대 약정금액의 10%까지는 IMF 비연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동 협정하의 인출자금의 만기는 3개월이나 최대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

1) 통화스왑협정이란 자국통화를 대가로 외국통화를 차입하고 일정기간 후 환매하는 중앙은행간 단기신용공여 계약을 말함

CMI하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은 ASEAN+3 국가들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출범한 지 2년 반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2년 8월 말 현재 총 10건, 270억 불 규모의 신규 스왑계약이 체결되었고, 4건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기존 통화스왑(50억 불)에 추가하여 20억 불 (2001. 7. 4), 중국과 20억 불(2002. 6. 24), 태국과 10억 불(2002. 6. 25), 말레이시아와 10억 불(2002. 7. 26), 필리핀과 10억 불(2002. 8. 9) 규모의 스왑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 외에 태국(30억 불, 2001. 7. 28), 필리핀(30억 불, 2001. 8. 30), 말련(10억 불, 2001. 10. 5, 기존 25억 불 별도), 중국(30억 불, 2002. 3. 28)과 협정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와는 협의중에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외에 태국(20억 불, 2001. 12. 6)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과 협의중에 있다.

현재 협상중인 양자간 스왑협정이 금년중에 모두 완료될 경우 CMI 체제의 기본틀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역내 단기자본이동 공동모니터링 채널 구축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단기투기성 자본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 2001년 5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료교환 양식을 기본으로 아세안 사무국이 마련한 template[2]를 사용해서 자본이동에 관한 통계자료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7개국이 양자간 자본이동자료 교환에

2) 자료교환 내용은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 외국인증권투자자금 국가별 순유입 현황, 단기외채동향 등임.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1999. 11.), 홍콩(2001. 12.), 필리핀(2002. 5.)과 자료 교환 중에 있으며, 태국과는 협의중에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자료를 교환중에 있으며, ASEAN 사무국에 설치(2001. 9.)한 '일본·ASEAN 금융기술지원기금'[3]을 통해, ASEAN 5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베트남)에 대한 단기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태국 및 인도네시아 등 자료 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행의 자료교환시스템 발전방안 연구 및 ASEAN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3. 역내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EWS)

2000년 4월 APEC 서울포럼과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역내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 구축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의 후속조치로 2001년 5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바에 따라 역내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EWS 기본모델(prototype)을 개발키로 합의하였다. 현재 ADB 주관으로 역내 EWS 기본모델을 개발하여 보완중에 있으며, 향후 워크샵을 개최하여 기본모델을 확정한 후 역내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역내 EWS 개발 제안국가로서 ADB 주도의 EWS 기본모델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각국이 동 모델을 기초로 자체 모형개발시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ADB 모델이 완료될 경우 이를 일부 수정하여

3) ASEAN 국가들의 자본이동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임 (총 2.32억 엔 규모).

역내국가의 위험도 점검에 활용할 계획이다.

4.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협의 강화방안 논의

ASEAN+3 회원국들은 CMI체제의 내실 있는 정착과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역내 정책협의(policy dialogue)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2001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호놀룰루)에서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협의(economic review and policy dialogue)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Study Group 구성[4]에 합의하였다.

그동안 2차례 개최된 회의를 통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공동 제안한 정책협의 강화방안을 논의중에 있는바, 1단계(phase one)로 ASEAN+3 재무장ㆍ차관회의 등 기존의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여 역내 경제동향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점검(peer review), 그리고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을 통해 역내 정책협의 기반을 구축키로 합의하고 금년부터 이를 시행중에 있다. 2단계(phase two)로 보다 강화된 정책협의체제 구축을 위해 역내 경제동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기구 구성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III. 향후 추진방향

최근 Euro화의 성공적인 통용 및 미주지역의 통화통합 논의 등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금융 및 통화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당국간의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4) Study Group은 ASEAN+3 정책당국의 국ㆍ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음.

동아시아 국가간 금융 및 통화협력은 역내국간 경제발전 및 금융시장 발전단계의 상이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경험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CMI 체제하의 양자간 통화스왑협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CMI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킨 후, 규모 확대, 자금공여조건 개선 등을 통해 CMI체제의 실효성(effectiveness)과 신뢰성(credibility)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현행의 다소 느슨한 형태의 양자간 통화스왑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IMF의 세계적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차원의 surveillance 체제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행의 ASEAN+3 대화채널을 적극 활용한 후, 역내 금융협력 진전상황을 보아가면서 독립된 기구설립 등 보다 효율적인 surveillance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역내 환율안정을 위해 정책당국자간 환율운용상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제반여건의 성숙정도를 보아가면서 역내 바람직한 환율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구조의 특성상, 역내 환율안정은 이 지역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내국간 국제적 협력을 통해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넷째, 취약한 역내 금융제도 및 금융시장이 1997년 아시아위기의 주요 요인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지역 각 나라들은 지속적인 금융구조개혁을 통해 회계·감사·공시제도 등 금융제도를 global standard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역내 자본시장 육성 및 발전 등 금융 인프라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1>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추진현황(2002년 8월 말 현재)

	한 국	일 본	중 국
한 국		계약체결 완료(01. 7. 4) · 20억 달러 (기존 50억 달러 별도) · 원/달러 one-way	계약체결 완료(02. 6. 24) · 20억 달러 · 원/위안 two-way (달러화 전환가능)
일 본	계약체결 완료(01. 7. 4) · 20억 달러 (기존 50억 달러 별도) · 원/달러 one-way		계약체결 완료(02. 3. 28) · 30억 달러 · 엔/위안 two-way (선진국형)
중 국	계약체결 완료(02. 6. 24) · 20억 달러 · 원/위안 two-way (달러화 전환가능)	계약체결 완료(02. 3. 28) · 30억 달러 · 엔/위안 two-way (선진국형)	
태 국	계약체결 완료(02. 6. 25) · 10억 달러 · 로칼/달러 two-way	계약체결 완료(01. 7. 28) · 30억 달러 · 바트/달러 one-way	계약체결완료(12. 6) · 20억 달러 · 바트/달러 one-way
필리핀	계약체결 완료(02. 7. 26) · 10억 달러 · 로칼/달러 two-way	계약체결 완료(01. 8. 30) · 30억 달러 · 페소/달러 one-way	실무협의중
말레이시아	계약체결 완료(02 8. 9) · 10억 달러 · 로칼/달러 two-way	계약체결 완료(01. 10. 5) · 10억 달러 (기존 25억 달러 별도) · 링깃/달러 one-way	실무협의중
싱가포르		실무협의중 · FTA협의와 연계	
인도네시아		실무협의중	

<참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추진일지

1999년 11월, **ASEAN+3 정상회의**(마닐라)에서 동아시아 역내 자구 및 지원메커니즘(self-help and support mechanism)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 2000년 2월 **한·중·일 국제금융국장회의**(벳부)에서 한·중·일 및 ASEAN을 포괄하는 스왑계약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ASEAN 측에 제안

2000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태국 치앙마이)에서는 역내 외환위기 재발방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역내 위기시 상호자금지원제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추진에 합의

2000년 9월 **ASEAN+3 재무장관/차관회의**(프라하)에서 CMI의 기본 메커니즘 논의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

2000년 11월 **ASEAN+3 Working Group 회의**(북경)에서 CMI의 기본 메커니즘에 합의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 Progress Report'를 **ASEAN+3 정상회의**(싱가포르)에 제출

▲ 동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ASEAN+3 국가들간에 통화 스왑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

2001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호놀룰루)에서 그동안의 추진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인 추진에 합의

▲ 아국은 일본과 기존스왑(50억 불)에 추가하여 20억 불의 신규 스왑계약 체결에 합의하였으며, 태국 및 중국과는 협의중임을 발표

2001년 11월 ASEAN+3 정상회의(브루나이)시 "동아시아 금융협력 Progress report"를 제출

2002년 5월 ASEAN+3 재무장관회의(상해)시 그동안의 협상현황을 발표하고, CMI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참고문헌>

왕윤종 외. 2000. 동북아경제협력: 금융협력.

조종화 · 김우진. 2001.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ASEAN 사무국(www.asean.or.id), ASEAN+3 정상회의 공동발표문(1999), 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발표문(1999, 2000, 2001, 2002).

재정경제부(www.mofe.go.kr). 보도자료.

한중일 금융협력세미나 발표자료 등.

ASEAN+3 협력체제 :
ASEAN의 시각과 전략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목 차

Ⅰ. 머리말
Ⅱ.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Ⅲ. ASEAN+3 역내 협력체제의 주요 현황
Ⅳ. 경제통합에 대한 ASEAN의 시각과 전략
Ⅴ.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Ⅰ. 머리말

외환위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매년 개최되면서 동아시아 역내 주요 현안은 물론 다각적으로 지역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으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분야 및 사회·문화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ASEAN+3 협력체제는 ASEAN의 역내 결속력을 바탕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부분이 ASEAN의 제안을 수용하거나 ASEAN+1 체제 하에서 협력사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외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지역주의 추세가 보다 강화되어 東아시아의 역내 무역·투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보다 증대된다면, ASEAN+3 협력체제를 매개로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대한 요구가 역내에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ASEAN 측도 AFTA가 개도국간 南-南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여 한국, 일본, 중국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ASEAN의 성장잠재력과 역내 시장통합의 조기실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 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동북아와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와 제도적 통합에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략적으로 'AFTA 조기실현 후 동아시아와의 단계적 경제통합'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ASEAN과 중국의 FTA 추진 합의로 일본, 호주 등도 ASEAN과의 경제협력 기반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ASEAN 역내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현격한 경제력 격차 및 산업발전의 차이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소간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ASEAN+3 협력체제의 출범배경과 협력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ASEAN이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어떠한 시각과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ASEAN+3 협력체제의 추진배경

1. 동아시아의 경제적 위상 증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통해 그동안 역동적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지역[1]은 경제규모 면에서 NAFTA, EU에 이어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ASEAN+3 경제권은 세계전체 GNI의 20.5%, 총교역액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1 참조).

실제로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東아시아의 순차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분업구조에 의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발전됨에 따라 역내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의 단계적 발전, 시장규모의 제약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의 동태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안행형태의 산업발전패턴(wild geese flying pattern)에 의하면, 일본을 선두로 아시아 NIEs → 선발 ASEAN → 중국 → 후발 ASEAN(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중층적인 분업관계가 발전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권 율, 1999).

이에 따라 ASEAN+3 지역의 역내수출 비중은 1985년 25.6%, 1990년 26.2%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 ASEAN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중국과 ASEAN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1995년 역내 수출비중은 34.2%로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ASEAN+3 지역의 대미수출비중은 1985년 30.8%에서 1995년 22.2%, 2001년 24.0%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도 2-1 참조). 외환위기 이후 역내수출비중이 다소 감소하고 있

1) 일반적으로 東아시아지역은 일본, ANIEs, ASEAN, 몽골, 연해주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나, 본고에서는 특별한 명기가 없다면 ASEAN, 한국, 중국, 일본으로 한정하였다.

<표 2-1> ASEAN+3의 경제적 비중(2000년 기준)

	인구	GNI	1인당 국민소득	수출	수입	교역규모	FDI
단 위	백만 명	십억 달러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십억 달러
ASEAN10	**516.3**	**538.8**	**1,044**	**424.7**	**366.0**	**789.6**	**13.9**
인도네시아	210	119.9	570	62.0	33.6	95.6	-4.6
태국	61	121.8	2010	68.9	62.0	131.0	2.5
말레이시아	23	78.5	3380	98.2	82.2	180.5	5.5
필리핀	76	78.7	1040	40.0	34.6	74.6	1.5
싱가포르	4	99.4	24,740	138.0	134.7	272.6	6.4
베트남	79	30.7	390	14.3	15.2	29.5	2.1
브루나이	0.32	5.2	15,641	1.1	n.a.	n.a.	0.02
라오스	5	1.5	290	0.3	0.56	0.9	0.07
미얀마	46	n.a.	n.a.	1.3	2.5	3.8	0.24
캄보디아	12	3.1	260	0.6	0.7	1.3	0.15
동북아	**1435**	**5862.9**	**4,086**	**901.16**	**765.104**	**1,666.3**	**59.2**
한국	47	421.1	8,910	172.6	160.5	333.1	10.2
중국	1261	1064.5	840	249.2	225.1	474.3	40.8
일본	127	4377.3	34,210	479.3	379.5	858.8	8.2
ASEAN+3(A)	**1,951.3**	**6,401.7**	**3,281**	**1,325.9**	**1,131.1**	**2,455.9**	**73.0**
세계전체(B)	6,054	31,171.0	5,150	6,350.1	6,550.7	12,900.8	1,270.8
*NAFTA(C)	411	10,790.7	26,255	1226.1	1,689.8	2,915.9	357.6
*EU15(D)	387.4	8,622.7	22,258	2,230.3	2,230.7	4,461.0	617.3
비중(A/B)	32.2	20.5	-	20.9	17.3	19.0	5.8
(C/B)	6.8	34.6	-	19.3	25.8	22.6	28.1
(D/B)	6.4	27.7	-	35.1	34.1	34.6	48.6

주 : 1) 브루나이 DRI-WEFA 자료 참조, 2) 미얀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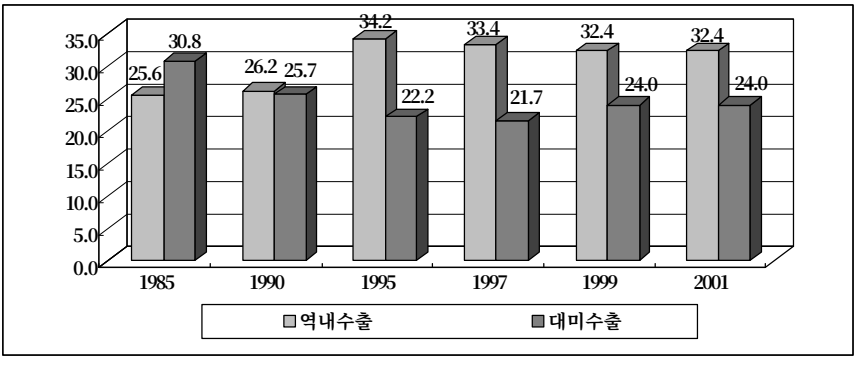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September 200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July 2001.

으나, 동 지역의 경제회복과 함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동적인 성장을 기록하면서 ASEAN,

중국 등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부상되자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어왔다. 특히 ASEAN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면서 NIEs와 함께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해왔고, 수출지향적 개발정책과 함께 외자주도형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도 2-1> ASEAN+3 역내 및 대미수출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주: ASEAN 통계는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제외.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KOTIS 데이터베이스 이용).

특히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체제로 전환되면서 1990년대 초반에는 중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본격화되었다. <표 2-2>에서 알 수 있듯이 1987~92년까지 東아시아지역으로 유입된 FDI는 연평균 세계전체 FDI의 9%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에는 22%로 급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여파로 전세계에서 東아시아로의 FDI 유입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1998년에는 10%, 2000년에는 6%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SEAN의 경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면서 FDI 유입액이 급감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자유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2-2> ASEAN+3의 FDI 유치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1987-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ASEAN+3(A)	16,011	44,216	55,185	62,949	73,572	82,822	70,701	78,361	72,991
인도네시아	999	2,004	2,109	4,346	6,194	4,677	-356	-2,745	-4,550
태국	1,656	1,805	1,364	2,004	2,271	3,627	5,143	3,562	2,448
말레이시아	2,387	5,006	4,342	5,816	7,296	6,513	2,700	3,532	5,542
필리핀	518	1,238	1,591	1,459	1,520	1,249	1,752	737	1,489
싱가포르	3,674	4,686	8,550	8,788	10,372	12,967	6,316	7,197	6,390
베트남	206	1,002	1,500	2,336	2,519	2,824	2,254	1,991	2,081
브루나이	1	14	6	13	-69	2	-20	-38	-19
라오스	4	36	59	95	160	91	46	79	72
미얀마	96	149	91	277	310	387	314	253	240
캄보디아	n.a.	54	69	151	294	204	121	135	153
한국	907	588	809	1,776	2,325	2,844	5,412	10,598	10,186
중국	4,652	27,515	33,787	35,849	40,180	44,237	43,751	40,319	40,772
일본	911	119	908	39	200	3,200	3,268	12,741	8,187
세계전체(B)	173,530	219,421	253,506	331,068	384,910	477,918	692,544	1,075,049	1,270,764
비중(A/B)	9%	20%	22%	19%	19%	17%	10%	7%	6%

주 : 브루나이 추정치.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2000, 2001*년판 참조.

2. 동아시아 경제협력구도의 변화

그동안 東아시아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협력기반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에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제안되었던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 East Asia Economic Caucus)[2]구상이 1993년 7월 ASEAN 외무장관회담에서 공식 합의된 바 있으나,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1991년 11월 베이커 국무장관을 통해 한·일 통상장관에게 각각 EAEC 불참요청을 한 바 있으며, 199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싱가포르 및 일본 방문시 EAEC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한다는 경고성 발언을 한 바 있다. 클린턴 행정부도 EAEC에 대해 여전히 APEC의 진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고, 일본도 아시아의 경제협력은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APEC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EAEC 무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SEAN은 중국과 함께 미국 중심의 아·태경제질서에 반대하면서 동아시아 경제권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갖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왔다. 특히 ASEAN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강화로 지역정세가 안정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유일의 지역공동체로서 정치·경제적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적으로는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하여 교역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통합을 가속화하면서, 역내 결집력을 활용하여 역외국과의 대화체제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아세안 지역포럼(ARF, 1994년 창설) 및 아세안확대외무장관회담(ASEAN PMC)을 통해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ASEAN 주도로 ASEM이 추진되고, EU의 결속력에 상응하는 東아시

2)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당초 EAEG(East Asian Economic Group)을 주장하였으나, 제안내용이 ASEAN에 의하여 공식 채택되면서 EAEC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Hadi Soesastro(2001), p. 226 참조.

아 국가간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SEM은 1994년 10월 고촉동 싱가포르 총리가 제안, 아시아 10개국(ASEAN, 한, 중, 일)과 유럽 15개국이 참가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1996년, 태국 방콕). 이러한 가운데 마하티르 총리가 1997년 ASEAN 30주년을 맞이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비공식 정상회담에 한국을 포함, 중국과 일본이 초청됨으로써 ASEAN+3 정상회담이 태동하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매년 ASEAN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을 공식 초청하여 ASEAN의 결집력을 토대로 ASEAN+3 역내협력 기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3.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제고

1998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이 본격 논의됨으로써 지역적 동질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온 APEC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치 못함에 따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에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반면, 東아시아 역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ASEAN+3 정상회담을 계기로 '東아시아'지역 개념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념보다 훨씬 부각되게 되었다. 태국에서 촉발된 외환위기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역내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었다. 역내 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을 조화시킴으로써 환율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단기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등이 역내 공동현안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ASEAN은 역내 결집력을 토대로 매년 ASEAN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을 공식 초청하여 ASEAN+3 역내협력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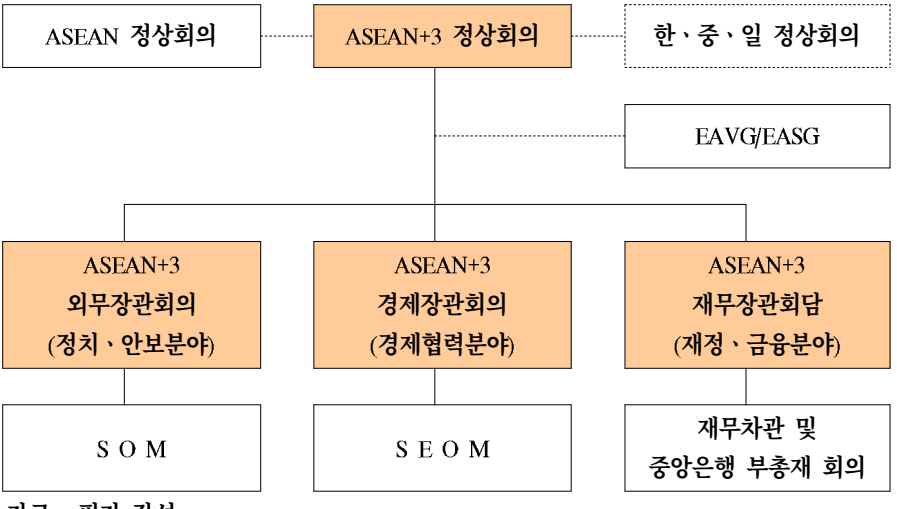
III. ASEAN+3 역내 협력체제의 주요 현황

1. ASEAN+3 정상회의와 역내협력체제

외환위기 이후 매년 ASEAN+3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1999년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연례화가 공식합의됨에 따라 2000년부터 외무회담, 경제장관회담, 재무장관회담이 상설화되어 역내 주요 현안과 협력방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도 3-1 참조). 그 밖에도 2001년부터 농림장관회의와 노동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도 장관회담과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 Meeting)가 개최되어 주요 의제 및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의체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 형식도 ASEAN+3 정상회담 후에 ASEAN+1의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도 3-1> ASEAN + 3 협력체제의 주요 현황



자료 : 필자 작성.

또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재무차관회의 등 다각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역내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크게 강화되어왔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처방안으로 역내 외환위기 방지 및 금융협력 체제 구축,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 등 다각적인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

<표 3-1> ASEAN+3의 東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1999. 11)

▲ 東아시아의 상호이해와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 증진

▲ UN헌장과 평화공존원칙 및 국제법 원칙 준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에 기초한 동아시아 국가간의 상호관계 증진

▲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확인하고,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대화과정 촉진

▲ 경제 및 사회분야

①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을 가속화하고, 정보·전자상거래의 기술협력과 중소기업의 강화를 장려하며, 민간의 참여 촉진,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혁에 공동 노력

② 통화·금융협력 : 정책대화와 조정 및 협력 강화로 거시경제 위험 관리, 역내 자본이동 감시, 국제금융체제 개편, 자구지원 메커니즘 창출

③ 사회개발·인재육성 : 역내 격차해소를 위해 사회·인적자원 개발, 기금설립에 의한 'ASEAN 인재육성 구상'을 실시.

④ 과학·기술개발

⑤ 문화·인적 협력을 통한 상호이해 및 우의 증진

⑥ 하노이 행동계획에 대한 지원

▲ 정치·기타 분야

① 정치·안전보장 : 東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화와 조정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감

② 영토문제 : 공통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강화

▲ WTO, APEC, ASEM 등 다양한 국제적·지역적 포럼과의 조화와 협력 강화

▲ 東아시아의 유대 강화와 금번 공동성명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관계장관들을 통해 고위관리 및 기존 기구를 활성화하기로 함.

자료 : 필자 작성.

련하게 되었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東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을 채택한 바 있다(표 3-1 참조).

한편, 2000년 11월 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동아시아 협력 강화'를 주제로 13개국 정상이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비전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2001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EAVG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실무적 검토를 위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 East Asia Study Group)의 중점연구분야를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동아시아 포럼 창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설정하자고 제안하였다.

2. EAVG/EASG

제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통령이 민간자문기구로서 제안한 바 있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 East Asia Vision Group)'이 구성되어 경제분야의 협력은 물론 정치·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아시아 역내 협력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보고서를 2001년 ASEAN+3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EAVG 보고서는 크게 경제, 금융, 정치, 환경, 사회·문화, 제도적 협력 등 6개 부문에 대한 협력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 및 금융분야에 대한 협력의 주요 내용은 <표 3-2>와 같다. 브루나이 정상회의에서는 EAVG 보고서 내용을 정부차원에서 승계하여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을 결성, 동아시아 경제통합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3-2> EAVG 보고서의 주요 내용(2001. 11)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추진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APEC의 보고르 목표(2010/2020) 이전에 추진하고, EAFTA 검토를 위한 각료급회의 개최 - 역내 최빈국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및 특혜조항을 고려 ▲ FDI 확대를 위한 투자유인환경 조성 : 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및 중소기업의 투자증진과 행정·금융 지원체제 수립 - ASEAN 투자지역(AIA)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여 동아시아 투자지역(EAIA) 설립 ▲ 자원 및 인프라 공동개발 추진 : 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등 3개 우선분야 지원협력 - 역내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기술이전 및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협력 ▲ 신경제하에서 인적자원 배양과 동아시아 정보하이웨이, 역내 소프트웨어 기술 및 멀티미디어 센터 건립, 동아시아 벤처기금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활성화 추진 ▲ 금융협력분야 : 역내차입협정과 환율공조체제 구축, 동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EAMF) 설립 추진

자료 : 필자 작성.

IV. 경제통합에 대한 ASEAN의 시각과 전략

1. AFTA 기반 확대 및 조기실현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매우 부진하였고, 단지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ASEAN만이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ASEAN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역내경제통합을 적극 추진해왔고,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베트남,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켜 'ASEAN 10'을 실현하였다. 특히 AFTA 조기실현을 추진하면서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 소위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동남아 시장통합을 적극 추진해왔다(표 4-1 참조).

<표 4-1> ASEAN의 경제협력 프로그램(AFTA 플러스) 추진현황

협력내용	프로그램	대상	특 징	비 고
무역자유화 조치	AFTA (93년 개시)	포괄적 자유화 (원칙적으로 전제품)	단계적 관세 인하 (CEPT)	CEPT 적용품목 이행 후 관세인하 : →20%→5%→0%, 2015년 완료
			비관세장벽 철폐	수량규제의 철폐 등
	AICO (96년 개시)	한정적 관세 인하 (제조업 부품 및 자재)	즉시 관세 인하	관세 5% 이하, AFTA 본격시동까지
투자자유화 조치	AIA (98년 개시)	전업종 대상	내국인 우대조치 자본 및 노동이동 자유화	
기타 원활화 조치	지적소유권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공통 상표제도 확립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국제규격·기준 적용, 시험·증명기관의 정비, 정보교환, 인재육성		
	관세협정	관세분류, 통관수속, 관세평가의 통일·간소화		
	경제정책의 협조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재정정책·규칙의 투명성 향상, 금융부문의 인재육성 등		
정보격차 완화	E-ASEAN (2000년 개시)	정보·통신	IT관련 정책 및 규제완화, 인적자원 공동개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자료 : 青木健編(2001), p. 34를 토대로 재작성.

ASEAN의 지역통합정책의 핵심은, 첫째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인하 계획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조치로서 역내 관세철폐를 목표로 AFTA가 추진되고 있고, 둘째 산업협력을 위한 한정적인 관세인하조치로서 ASEAN 산업협력계획(AICO : ASEAN Industrial Cooperation)가 실시되어 왔다. 셋째 투자자유화조치로서 아세안투자지대(AIA : ASEAN Investment

Area)가 실행단계에 있다. 그 외에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원활화조치, 지적재산권 보호, 규격·표준의 상호인증, 관세협정, 정책협조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아의 단일시장 통합노력으로서 FDI 유치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SEAN+3 협력체제에 있어서 ASEAN의 기본적인 전략은 AFTA의 조기실현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역협력체로서 ASEAN의 위상과 결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와의 경제협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3 정상회의 추진과 병행하여 그동안 AFTA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통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FTA 실현을 2003년에서 2002년으로 앞당긴 바 있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1999년 11월 필리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ASEAN 비공식정상회의에서는 기존 6개 회원국은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후발가입국은 2018년에서 2015년까지 역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3)]

2002년 7월 현재 기존 6개국에 있어서 관세인하 적용품목은 총 44,162개가

3) 금융위기 이전부터 AFTA 조기실현을 위해 ASEAN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992년 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FTA 창설에 합의한 이래 1992년 12월 AFTA평의회에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추진에 합의하고, 2008년을 목표로 역내 공산품 관세를 5%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NAFTA, EU의 출범,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1995년 12월 ASEAN 경제각료회담에서 목표년도를 종전의 CEPT협정 발효 후 15년(2008년)에서 10년(2003년)으로 5년간 단축키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98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5차 정상회의에서 다시 1년 앞당겨 기존 회원국 ASEAN6에 한해 2002년으로 목표년도를 앞당기게 된 것이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ASEAN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ASEAN Vision 2020의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을 채택한 바 있다.

설정되어 5% 이하의 관세인하 실행율은 96.2%에 이르고 있고, 5% 초과의 관세인하 대상 품목비중은 3.8%에 불과하다. 국별 관세인하 실행율은 싱가포르 100%, 브루나이 99.75%, 말레이시아 90.91%, 태국 95.03%, 필리핀 96.31%, 인도네시아 99.07%이다. 한편,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2003년까지 적용품목의 76.79%를 관세인하계획에 적용시켜 5% 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하였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2005년까지 관세인하율 목표를 각각 86.90%, 83.43%로 설정하고 있다(표 4-2 참조).

그러나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AFTA 출범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촉진됨에 따라 아세안 각국간의 산업재배치는 역내 관세인하와 맞물리면

<표 4-2> ASEAN 회원국의 CEPT 관세인하품목(2002년 7월 현재)

	관세인하품목					비율				
	IL	TEL	GEL	SL	계	IL	TEL	GEL	SL	계
브루나이	6,276	0	202	14	6,492	96.67	-	3.11	0.22	100
인도네시아	7,206	7	68	4	7,285	98.92	0.10	0.93	0.05	100
말레이시아	10,041	218	53	83	10,395	96.59	2.10	0.51	0.80	100
필리핀	5,576	0	16	66	5,658	98.55	-	0.28	1.17	100
싱가포르	5,859	0	0	0	5,859	100.00	-	-	-	100
태국	9,204	0	0	7	9,211	99.92	-	-	0.08	100
ASEAN 6	**44,162**	**225**	**339**	**174**	**44,900**	**98.36**	**0.50**	**0.76**	**0.39**	**100**
캄보디아	3,115	3,523	134	50	6,822	45.66	51.64	1.96	0.73	100
라오스	2,098	1,291	74	88	3,551	59.08	36.36	2.08	2.48	100
미얀마	3,580	1,823	48	21	5,472	65.42	33.32	0.88	0.38	100
베트남	5,559	737	139	51	6,486	85.69	11.38	2.14	0.79	100
CLMV	**14,352**	**7,374**	**395**	**210**	**22,331**	**64.27**	**33.02**	**1.77**	**0.94**	**100**
ASEAN 합계	**58,514**	**7,599**	**734**	**384**	**67,231**	**87.03**	**11.30**	**1.09**	**0.57**	**100**

자료: ASEAN 사무국.

서 각국의 경쟁우위에 입각한 무역흐름의 재편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현재 산업발전단계의 큰 격차로 경제통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잠정배제품목 설정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에 마찰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다소 차질을 빚고 있는 관세인하계획은 물론 비관세장벽 철폐 등 역내국간 상호 마찰요인이 높아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잠정배제품목과 관련하여 당초 관세인하계획에는 2000년부터 적용대상품목으로 이전시키기로 했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연기 요청으로 순조로운 계획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산업발전단계과 국별 산업정책 때문에 잠정적인 예외품목 설정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회원국 사정을 고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TEL 의정서(Protocol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T Scheme Temporary Exclusion List)가 체결된 바 있다.[4] 현재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국 자동차 산업보호를 위해 자동차관련 218품목에 대해 2005년까지 유예하여 태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인도네시아 21개 품목, 필리핀 6개 품목의 유예를 결정하였다(표 4-3 참조).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잠정적 예외품목을 218개 설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동차 부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태국이 이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역내 관세인하계획에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2002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했던 기존 회원국의 관세인하계획을 순조롭게 완료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AFTA는 회원국간 경제력 차이가 크고,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

4) ASEAN 각국의 경제부 장관들은 2000년 11월 23일, Protocol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EPT Scheme Temporary Exclusion List에 서명하였고, 동 의정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CEPT TEL에 속해 있는 TEL 제조품으로 한정하였다.

아 현단계에서는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부품산업관련 무역전환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역내 교역 확대보다는 외국인투자 여건의 개선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SEAN은 AFTA를 기반으로 경제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AIA, ASEAN 지적소유권 협력협정, 규격 및 표준의 상호인증협정, ASEAN 관세협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AFTA 조기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ASEAN+3 협력체제에 있어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표 4-3> ASEAN 6의 CEPT 관세인하 실행현황(2002년 7월 현재)

	관세인하				비율			
	0~5%	5% 초과	기타	계	0~5%	5% 초과	기타	계
브루나이	6,260	4	12	6,276	99.75	0.06	0.19	100.00
인도네시아	7,139	67		7,206	99.07	0.93	-	100.00
말레이시아	9,128	913		10,041	90.91	9.09	-	100.00
필리핀	5,370	206		5,576	96.31	3.69	-	100.00
싱가포르	5,859			5,859	100.00	-	-	100.00
태국	8,747	457		9,204	95.03	4.97	-	100.00
ASEAN 6	**42,503**	**1,647**	**12**	**44,162**	**96.24**	**3.73**	**0.03**	**100.00**
캄보디아	238	2,877		3,115	7.64	92.36		100.00
라오스	1,295	803		2,098	61.73	38.27		100.00
미얀마	2,850	730		3,580	79.61	20.39		100.00
베트남	3,623	1,936		5,559	65.17	34.83		100.00
CLMV	**8,006**	**6,346**		**14,352**	**55.78**	**44.22**		**100.00**
ASEAN 합계	**50,509**	**7,993**	**12**	**58,514**	**86.32**	**13.66**	**0.02**	**100.00**

자료: ASEAN 사무국.

2.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동남아 시장의 성장잠재력과 역내 시장통합의 조기실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AFTA는 EU와 NAFTA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南-南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AFTA는 개발도상국간의 南-南협력에 의한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역내 기술 및 자본 부족에 따라 통합체 내의 경제적 자립이나 내부결속력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통합체를 이끄는 중심국가(leading country)로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나라가 없어 AFTA의 진로와 향후 추진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장 선진국인 싱가포르도 그 규모 면에서 지역중심국이 되기에는 너무 작고, 인도네시아는 경제규모는 크나 아직 발전단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유력하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추진력을 갖기에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ASEAN은 산업연관관계가 높은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와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와 제도적 통합에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전략적으로 'AFTA 조기실현 후 동아시아와의 단계적 경제통합'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산업발전단계가 낮은 후발가입국(CLMV)은 AFTA를 통한 ASEAN 회원국간의 경제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이고,[5] 동아시아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

5) ASEAN은 동북아와 함께 호주,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SEAN+CER 확대회담도 개최해왔는데, 후발가입국들의 회의적 입장 때문에 2001년 9월 ASEAN 경제회담에서 ASEAN+CER 경제협의체 구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1년 합의한 중국과 ASEAN의 자유무역지대 합의 결정도 10년간 유예기한을 설정해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어 ASEAN 회원국간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에 대해서는 ASEAN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아직 구체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말레이시아도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3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등 역내경제통합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ASEAN의 기본적 시각은 동북아 3국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동남아와 동북아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역내협력체로서보다는 ASEAN 주도하에 무역·투자원활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내 균형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확대 및 후발가입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논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역통합에 대한 ASEAN 주요국의 입장전환

ASEAN 차원에서 ASEAN+3 협력체제를 추진하면서 AFTA 조기실현, 동북아 3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지역협력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ASEAN 차원의 시장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악화가 지속되면서 AFTA를 통한 경제통합과 그 효과 자체에 회의적인 태국, 싱가포르 등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방경제체제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뉴질랜드(1999. 11), 일본(2002. 1), EFTA(2002. 6)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APEC 회원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태국도 호주,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고려하고 있고, 필리핀은 태국과 마찬가

지로 일본과 금년 5월 양국경제협정 체결을 위한 검토작업에 합의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은 싱가포르, 태국 등이 쌍무적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역점을 둠으로써 AFTA, AIA 등 역내 지역협력협정을 약화시키고, 주요 역외국가들에게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주룽지 총리가 ASEAN과의 FTA 추진을 전격적으로 제의하고,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10년 내 중·ASEAN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FTA 협정 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과 ASEAN·중국 무역협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합의사항과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

ASEAN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 때문에 경제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기반 강화를 통해 수평적 분업관계를 구축하여 중국과의 교역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6] 반면,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중국 서남부 개발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ASEAN과의 경제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합의하자, 향후 본격화될 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에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면서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한 바 있다. 일·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9년 12월 일본의 오부치 전 총리와 고척동 총리와의 합의로 양국 FTA 공동연구가 추진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9월 FTA 협정 추진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를 토대로 2000년 10월 고촉동 총리와 모리 총리는

6) Mari(2001) 참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키로 공식합의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협상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간의 협정은 공식적 명칭이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제휴협정(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 이하 EPA)'으로서 무역자유화는 물론 금융, 정보통신, 과학기술, 방송, 관광 등 투자 및 서비스 시장개방과 인적교류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러한 EPA는 양국 경제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온 농업을 포함한 일부 광공업 제품의 관세철폐에 부담을 느끼고,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EPA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싱가포르 EP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자유화 부문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금년 초 고이즈미 총리의 동남아 순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남아 각국은 농산물을 제외한 일본과의 FTA 추진에 냉소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열대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전향적 입장을 취하면서 동남아와 경제통합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농산물을 제외한 EPA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동남아와의 지역무역협정을 위한 협력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ASEAN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효과가 높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혹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은 물론 산업발전단계에서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V. ASEAN+3 협력체제에 대한 평가

1. 주요 성과

그동안 동아시아 역내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매우 부진하였으나, ASEM 출범과 東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역내협력 강화를 위한 ASEAN+한·중·일 정상회담이 역내 협의체로서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으로서 출발하였지만,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안보분야 및 사회·문화분야 등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포럼으로서 ASEM 내 EU에 상응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EAEC가 APEC의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미국, 호주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ASEAN+3 협력체제는 현재 'ASEM 내 협의회' 성격을 가지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금융 및 산업정책, 역내 개발협력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그동안 동아시아 국가간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한 유용한 포럼으로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나, 운영형태 및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운영형태에 있어서 ASEAN이 주도권을 가지고, ASEAN+3 정상회의를 운용함으로써 동남아와 동북아의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ASEAN은 기존 동남아 국가들간의 협력체제를 외연적으로 확대하여 ASEAN+3 정상회의, 각료회의, SOM, SEOM을 운용하고 있고, 회의일정이나 의제설정에 있어서 ASEAN 회원국들의 사전합의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주요 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의 경우 ASEAN+3 회의에 이어 한·중·일을 대상으로 각각 ASEAN+1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역내협력을 위한 공동현안보다는 ASEAN 측이 요구하는 경협사안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ASEAN이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운영체제는 ASEAN+3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ASEAN에 대응하는 '동북아 경제협의체' 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차원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활성화시켜 동북아 3국의 경협증진방안 및 주요 경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 동남아와 동북아의 대등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 향후 전망

앞으로 지역주의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 형성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東아시아 내 무역·투자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고,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에 대하여 일본, 중국은 물론 일부 ASEAN 회원국 등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동아시아 역내경제구조를 고려해 볼 때 상호 경쟁적이면서 잠재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설립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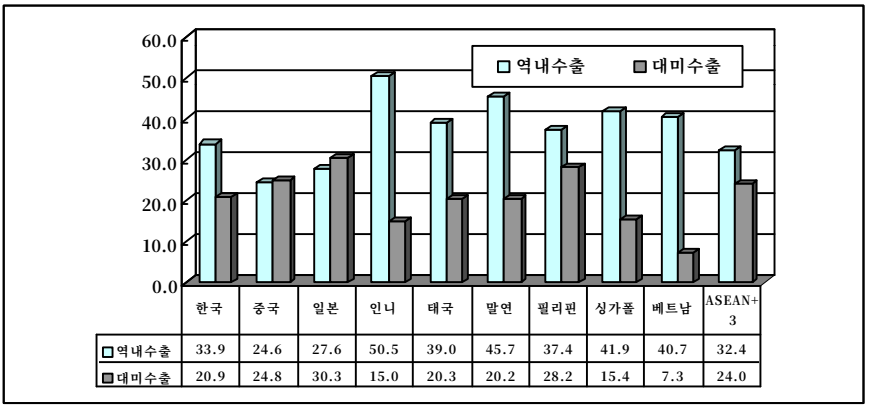
그러나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대내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사회문화,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인구, 면적, 국민소득 등 경제적인 측면

에서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어 순조롭게 역내통합과 상호발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개도국 분류에 의하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은 1인당 GDP가 400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어 역내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서 저소득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역내국가들의 태도와 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자체가 성공적인 협력을 보장해줄 수는 없으며, 역내에 상존하는 문화적·이념적·종교적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결속이 경제협력체로 급속히 발전해간다면, 또다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을 우려한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역외국의 반대가 예상된다.

<도 5-1> ASEAN+3의 국별 역내수출 및 대미수출비중 비교(2001년)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인니	태국	말연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ASEAN+3
역내수출	33.9	24.6	27.6	50.5	39.0	45.7	37.4	41.9	40.7	32.4
대미수출	20.9	24.8	30.3	15.0	20.3	20.2	28.2	15.4	7.3	24.0

자료 : 도 2-1과 동일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아직도 최대시장인 대미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감안해볼 때(도 5-1 참조), 급속히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시키고, 폐쇄적인 경제블록화를 형성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ASEAN+3 협력체제가 현단계에서 자유무역지대를 급격히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역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타적인 지역주의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SEAN+3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상호의존주의에 입각한 협의체 수준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표 5-1 참조).

이를 통해 ASEAN+3 협력체널을 통해 대외경제와 관련된 지역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하다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APEC은 물론 WTO 혹은 국제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상력을 점차 제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조정과 조화를 강조하는 점진적인 통합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급속히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역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유발시키고, APEC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정세와 지역주의 추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단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APEC과 ASEAN과는 달리 느슨한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협의체를 유지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역내국가들과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경제블록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역내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동아시아 차원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 블록화 구상을 추진해 나가

<표 5-1>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와 주요 지역협력체 비교

구분	APEC	ASEAN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성격	아·태지역 정부간 경제협력기구	동남아지역의 정치·안보·경제협력기구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의체(ASEM내 협의기구)
협력형태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 주도의 남-북협력체	개도국간 남-남협력체	동아시아지역 내 남-북협력체
협력이념	개방적 지역주의	폐쇄적 지역주의(AFTA 결성) 만장일치제, 내정불간섭주의	상호의존주의, equal partnership
회원국 구성	- 21개국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멕시코, 칠레 등	- 동남아 10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동북아 3개국
운영체제	정상회의 연례 개최 각료회의 : 연 1회 개최 - 무역투자위원회(CTI) - 예산행정위원회(BAC) - 경제위원회(EC) - 실무작업반회의	정상회의 연례개최 외무장관회담(AMM) 매년 개최 경제장관회담(AEM) 매년 개최 - 상임위원회(ASC) - 아세안 사무국(자카르타) - 분야별 장관회의 수시개최	정상회의 연례개최 외무장관회담 : 연 1회 개최 경제장관회담 : 수시개최 재무장관회담 : 연 1회 동아시아 비전그룹 활동중 (ASEM 격년 개최)
주요협력내용	무역·투자자유화(IAP, CAP) 무역·투자원활화 경제기술협력(ECOTECH)	공동유효특혜관세협정(CEPT) ASEAN 투자지역협정(AIA) 지적재산권협정, E-ASEAN	동아시아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정치·안보, 경제·금융, 산업) ·개발협력, 과학·기술 등 포괄적 협력)
협력목표	2010/2020년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개방적 지역주의 실현	동남아지역의 정치·경제통합	역내국가들의 균형발전 (equitable growth; 동반성장)

자료 : 필자 작성.

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차원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통합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ASEAN+3 협력체제를 지렛대로 역내 국간의 조율, 미국 및 APEC과의 관계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 율. 1998.「동남아경제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대외경제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1999.「일본의 동남아 진출전략과 新미야자와 구상」.『대외경제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AFTA 관세인하계획 추진과 향후과제」.『KIEP 세계경제』 2002년 4월호. 제5권 제4호 통권 4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재원. 1990.「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정책연구 9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青木健編. 2001.『AFTA : ASEAN經濟統合の實狀と展望』. JETRO.

ASEAN Secretariat. 1995. AFTA Reader. Vol. 2. 1995. Vol. 3. Jakarta.

Sixth ASEAN Summit. 1999. Jakarta.

Southeast Asia : A Free Trade Area. 2002. Jakarta.

Gerald Tan. 1996. *ASEA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Times Academic Press.

Hadi Soesastro. 2001. "Towards an East Asian Regional Trading Arrangement." In Simon S. C. Tay(eds.). Reinventing AS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 Studies(ISEAS). Singapore.

Imada, P., S. Naya and M. Montes. 1992. A Free Trade Area : *Implication*

for ASEAN. ISEAS. Singapore.

Mari Pangestu. 2002. "Facing the China Challenge : Options for Indonesia and Asean." In Mohamad Ikhsan, Chris Manning and Hadi Soesastro. *EKonomi Indonesia di Era Politik Baru.* KOMPAS press.

Mya Tan and Carolyn L. Gates. 2001. *ASEAN Enlargement.* ISEAS. Singapore.

Naya, S. and M. G. Plummer. 1991. "AS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ASEAN Economic Bulletin.* Vol. 7. No. 3. pp. 261-276.

Pangestu, M. 1995. "ASEAN Free Trade Area (AFTA) : An Indonesian Perspective." *The Indonesian Quarterly.* Vol. 23. No. 1. pp. 38-55.

Ramasamy, B. 1994. "The ASEAN Free Trade Area : Implications for Indonesia's Import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Vol. 30. No. 2. pp. 149-157.

World Bank. 2001. *World Development Report 2002.*

UNCTAD. 2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http://www.aseansec.org

ASEAN+3 전망 및 대응과제

김 성 인
(외교통상부 신흥시장과장)

목 차

Ⅰ. 동아시아 협력 추진경위
Ⅱ. ASEAN+3 framework 및 논의 결과
Ⅲ. ASEAN+3 협력현황 평가
Ⅳ.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 동향 및 각국 반응
Ⅴ. 제6차 정상회의 논의 전망
Ⅵ. 제6차 정상회의 관련 우리의 과제
<참고 1> 주요 제안사업 현황
<참고 2>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참고 3> EASG 활동 경과

Ⅰ. 동아시아 협력 추진경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정은 아래 4단계를 통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 마하티르 수상의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제안

19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 East

Asia Economic Caucus)를 제안하였으나, 이를 APEC 진전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인식한 미국의 견해와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었다.

2. 아시아 금융위기의 발생

그러나 1996년 ASEM이 정식 출범하고 이어 1997년에는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간에 본격적인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시 WTO 뉴라운드 출범이 실패로 끝난 후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세계적인 FTA 및 지역협력 추세 또한 아시아 역내협력 강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 아세안+3 역내교역 비중('00년)

- 아세안+3 전체 : 33.9%, 동북아 : 18.6%
- 한편, EU는 60.2%, NAFTA는 45.3%의 역내 교역비중을 가짐

3. ASEAN+3 정상회의의 출범 및 정례화

이러한 아시아 역내협력 강화 움직임의 한 결과로서 ASEAN은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국 정상들을 초청하였으며, 이는 향후 ASEAN+3 정상회의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ASEAN+3 각국 정상들은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의시 ASEAN+3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으며 아울러 ASEAN+3 외무장관,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회의도 각각 정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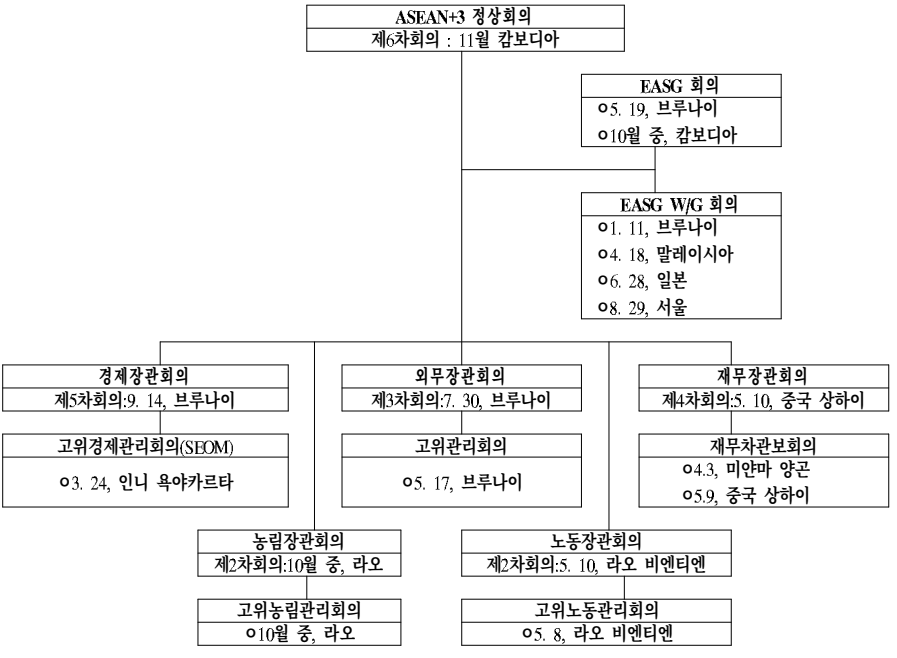
4.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 개시

한편, 1998년 12월 하노이 정상회의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

으로 1999년 10월에는 동아시아 13개국 2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발족되었으며 1999년 11월 마닐라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3월에 정부고위관리로 구성된 동 연구그룹이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EASG는 2001년 11월 브루나이 정상회의에 제출된 EAVG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동 검토결과를 2002년 말 정상회의시 보고할 예정이다.

II. ASEAN+3 framework 및 논의 결과

1. ASEAN+3 framework



2. 아세안+3 정상회의 결과

제1차 회의(1997. 12, 말레이시아)에서는 향후 아세안+3 정상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한·중·일의 AFTA 참여, 역내 은행강화문제, ASIATOM 창설문제, 및 유럽단일통화(EURO)에 대한 연구 등이 논의되었다. 제2차 회의(1998. 12,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문제를 비롯하여, 재무차관회의 개최(1999. 3, 1999. 11, 2000. 3 3차례 기개최), 미야자와 플랜 협력, 역내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금융경색 해소 방안, 아세안+3 정상회의 정례화 등이 참가국의 관심 속에 논의되었다. 제3차 회의(1999. 11, 필리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들이 제시·논의되었는데, 공동선언 채택,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을 위한 연구제의, 외무 및 관계장관회의 개최(관계 SOM 개최), 경제·사회분야(무역, 투자, 기술이전, IT, E-commerce, 산업, 농업, SMEs, 관광, 메콩강 유역 개발 참여, 민간협력, 통화금융협력, 사회분야 및 HRD협력, 과기협력, 문화정보협력, 개발협력 등) 및 정치분야 등에서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제4차 회의(2000. 11, 싱가포르)에서 참가국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인 협력방안 논의 위주에서 탈피, 역내 국가간 사회문화적 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EASG 설치제의, 경제분야(역내 통화 Swap 협정의 신속한 체결, 투기성 단기자본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체제 마련, 국제금융체제 개편) 외에도, 문화분야(미래지향적 인적교류 사업 강화, 인적자원개발 확대), IT협력 강화(동아시아정보통신장관회의 개최 추진, 동아시아 IT 인턴십 프로그램, 청년 IT 봉사단 사업) 등이 논의되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작년 제5차 회의(2001. 11, 브루나이)에서 우리 측은 동아시아 연구그룹의 중점 연구 대상 분야로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동아시아 포럼 창설,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하였으

며, 이외에도 동아시아 IT특별협력이니셔티브, IT인턴십 프로그램, 단기 자본이동관련 고위관리회의 개최, 에너지 협력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참가국 정상과 협의하였다. 한편 금년도 제6차 ASEAN+3 정상회의는 11월경 캄보디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ASEAN+3 정상회의 산하 관계장관회의 개최현황은 아래와 같다.

경제장관회의(우리 측 수석대표 : 통상교섭본부장)

ㅇ 제1차 경제장관회의(2000. 5. 2, 양곤)
- 제1차 SEOM+3(2000. 3. 24, 양곤)
- 제2차 SEOM+3(2000. 7. 19, 방콕)
- 제3차 SEOM+3(2000. 10. 3, 치앙마이)

ㅇ 제2차 경제장관회의(2000. 10. 7, 치앙마이)
- 제4차 SEOM+3(2001. 3. 27, 쿠알라룸푸르)

ㅇ 제3차 경제장관회의(2001. 5. 4, 시암릡)
- 제5차 SEOM+3(2001. 8. 15, 브루나이)
- 제6차 SEOM+3(2001. 9. 8, 하노이)

ㅇ 제4차 경제장관회의(2001. 9. 12, 하노이)
- 제7차 SEOM+3(2002. 3. 24, 욕야카르타)

ㅇ 제5차 경제장관회의(2002. 9. 14,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외무장관회의(우리 측 수석대표 : 외교통상부장관)

ㅇ 제1차 외무장관회의(2000. 7. 26, 방콕)
- 제1차 SOM+3(2000. 5. 20, 방콕)
- 제2차 SOM+3(2000. 7. 26, 방콕)
- 제3차 SOM+3(2000. 11. 22, 싱가포르)

ㅇ 제2차 외무장관회의(2001. 7. 24, 하노이)
- 제4차 SOM+3(2001. 5. 19, 하노이)
- 제5차 SOM+3(2001. 7, 하노이)
- 제6차 SOM+3(2001. 11, 브루나이)

ㅇ 제3차 외무장관회의(2002. 7. 30, 브루나이)
- 제7차 SOM+3(2002. 5. 18, 브루나이)
- 제8차 SOM+3(2002. 7, 브루나이)

재무장관회의(우리 측 수석대표 : 재정경제부장관)

ㅇ 제1차 재무장관회의(2000. 5. 8, 치앙마이)
- 제1차 AFDM(차관보급)+3(1999. 3. 18, 하노이)
- 제2차 AFDM+3(1999. 11. 25, 마닐라)
- 제3차 AFDM+3(2000. 3. 24, 브루나이)
- 제4차 AFDM+3(2000. 9. 24, 프라하)

ㅇ 제2차 재무장관회의(2000. 9. 25, 프라하)
- 제5차 AFDM+3(2000. 11. 7, 북경)
- 제6차 AFDM+3(2001. 4. 8, 쿠알라룸푸르)
- 제7차 AFDM+3(2001. 5. 8, 호놀룰루)

ㅇ 제3차 재무장관회의(2001. 5. 9, 호놀룰루)
- 비공식 AFDM+3(2002. 4. 3, 양곤)
- 제8차 AFDM+3(2002. 5. 9, 상해)

ㅇ 제4차 재무장관회의(2002. 5. 10, 상해)

농림장관회의(우리 측 수석대표 : 농림부장관)

ㅇ 제1차 농림장관회의(2001. 10. 5, 메단)
- 제1차 SOM-AMAF+3(2001. 10. 3, 메단)
- 제2차 SOM-AMAF+3(2002. 10, 라오 예정)

ㅇ 제2차 농림장관회의(2002. 10, 라오 예정)

노동장관회의(우리 측 수석대표 : 노동부장관)

ㅇ 제1차 노동장관회의(2001. 5. 11, 쿠알라룸푸르)

ㅇ 제2차 노동장관회의(2002. 5. 10, 라오 비엔티엔 예정)
- 제1차 SLOM(2002. 5. 8, 라오 비엔티엔)

III. ASEAN+3 협력현황 평가

1. ASEAN 주도에 의한 협력체제

ASEAN이 회의 개최의 주도권을 갖고 ASEAN 국가들의 컨센서스에 근

거하여 회의일정 및 의제설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공동 협력사업도 주로 ASEAN 측의 요청사업에 대해 한·중·일 3개국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력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사무국, 절차 등)이 미비되어 있어 협력사업의 선정, 시행 등이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2. ASEAN+3간 협의채널 정비 및 협력사업 시행 초기단계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현재로서는 아세안+3가 독자적인 예산과 상설기구를 지닌 지역협력체인 EU나 자유무역지대인 NAFTA와는 달리 역내 국가간 공동협력 모색을 위한 협의채널 설치·정비 등에 있어 시행 초기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사업의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구체적인 공동협력사업의 제안, 합의, 시행 등 협력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이행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낸다.

3. 동아시아 지역협력으로의 발전 시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EAVG와 EASG의 설치 및 연구작업은 ASEAN+3 차원의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멘텀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ASEAN 국가들은 ASEAN의 집단정체성 및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급속한 변화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정치체제 및 경제발전단계의 상이, 문화·종교·언어적 다양성 등으로 인해 지역적 정체성(regional identity)이 결여된 결과이기도 하다.

4. 본격적인 동아시아지역 협력보다는 당분간 느슨한 형태의 ASEAN+3 협의체제 지속 전망

상기와 같이 ASEAN 국가들이 점진적 협력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발맞추어 중국과 일본도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동아시아지역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투자 및 기술이전, IT산업 진흥, 중소기업 육성 및 인적자원 개발 등 ASEAN 측 관심분야에 대해 한·중·일이 지원하는 현재의 협력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V.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 동향 및 각국 반응

1. 논의 동향

아시아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지난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가 국가들간에는 동북아와 동남아의 구별을 넘어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내 국가간에 형성된 공동인식은 1999년 11월 마닐라 정상회의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0년에 설치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이 작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시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평화, 번영, 진보를 향한 동아시아 공동체(3Ps : East Asia Community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비전과 경제협력, 금융협력, 환경 및 에너지 협력, 사회·문화 및 교육협력 등 분야에서 권고사항[1]이 제시되는

1) East Asia Vision Group Report 2001 ;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등 역내 국가간 공동체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동 보고서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투자지대, 동아시아 차입약정(East Asian Arrangement to Borrow)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동아시아 환경협력기구, 동아시아 장학기금의 설치 등이 정책권고의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시 김대중 대통령의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설치를 제안함으로써 2001년 3월 정부고위관리로 구성된 동 연구그룹이 발족되었다. EASG는 2001년 11월 브루나이 정상회의에 제출된 EAVG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동 검토결과를 금년말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관련 각국 반응

1) 우리 제안 내용(2001. 11, 브루나이)

우리 측은 동아시아 연구그룹를 통해 동아시아 정상회의[2]의 출범과 동아시아 포럼[3] 창설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정상회의와 포럼이 조만간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되기를 희망하는바, 중간단계로서, 각국에 설치되어 있는 자유무역지구를 상호연계하여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우리 제안에 대한 각국별 반응[4]

중국은 먼저 EAVG 보고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EASG가 EAVG 보고

2) 「아세안+3 정상회의」를 전환.
3)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후속기관.
4) 외교통상부 자료.

서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EAVG가 귀중한 권고사항을 제시해준 것을 환영하고 EASG가 동 보고서를 검토, 유용한 방안들을 제시해줄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EASG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태국은 한국이 제안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포럼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바, EASG가 동 작업을 수행해 나갈 것을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라오스는 EAVG 보고서 권고사항 중 구체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울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 한국의 제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EU, NAFTA 등 세계적 지역화 추세 속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다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13개국이 동등한 위치로 참여케 되는 경우, 아세안의 의미가 퇴색하게 될 가능성에 비추어, 아세안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동 정상 회의를 3~4년 주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아세안+3 정상회의 계속 개최).

또한 미얀마는 한、중、일 3국 정상들이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을 살펴볼 때 언젠가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세안+3 정상회의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EAVG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동아시아 협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반면 동아시아 포럼의 창설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앞으로 EASG가 EAVG 보고서 권고사항을 심도 있게 연구하

여 아세안+3 협력을 위한 우선분야를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동 정상회의에 아세안은 계속 1개 그룹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선 아세안+3 사무국 설립을 제안하였다. 필리핀은 EAVG, EASG 등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이러한 각국 정상들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의장국이었던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은 EASG가 EAVG 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며, 특히 보고서 권고사항 중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포럼,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이상 3개 사항은 우리 대통령 제안), 인적자원개발, 동아시아 Business Council(이상 2개 사항은 브루나이 제안), 아세안+3 사무국(말레이시아 제안)을 중점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요지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의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논의결과를 요약[5]하였다.

V. 제6차 정상회의 논의 전망

우선, 동아시아 협력의 이정표가 될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6]에 대한 ASEAN+3 정상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5) Press Statement by the Chairman of the 7th ASEAN Summit and the 5th ASEAN+3 Summit(November 5, 2001, Bandar Seri Begawan).

6) 지난 2002. 8. 29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EASG 실무그룹회의에서 보고서 초안을 완료하여 각국에 배포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금번 정상회의시 제출될 예정이다.
- 체제 : ① 서론 ② EAVG 건의사항 평가(전반적 평가, 개별 건의사항 분석, 우선순위 부여 협력 조치 선정), ③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미 평가 ④ 결론
- 내용 : 총 57개의 EAVG 권고사항 중 단기 17개, 중장기 9개 등 26개의 "실현이용이한 구체적 협력조치" 선정

둘째,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지역개발을 위한 한·중·일의 실질적인 지원 및 참여를 보다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아세안 사무국 주도로 동아시아 협력 공동선언 이행상황 및 브루나이 정상회의 후속조치 matrix가 금번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또한 제1차 메콩강 유역 정상회의[7] 및 제1차 ASEAN Business Summit 회의도 금번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셋째, ASEAN+3 메커니즘 효율화 논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경제, 외무, 재무, 농림, 노동장관회의가 가동중인바, 향후 자원(아세안 희망),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중국 희망) 등의 분야에서도 장관회의가 확대·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간에 교체개최되고 있는 ASEAN+3 회의가 향후에는 한·중·일 및 아세안 국가간에 상호교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아세안 내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아세안 사무국에서 관련 상세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VI. 제6차 정상회의 관련 우리의 과제

우선 동아시아 협력 이니셔티브 결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구체적 협력조치를 담고 있는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 대해 정상간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는바, 동아시아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니셔티브와 그 결실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동아시아 포럼" 등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3대 중점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연구과제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

7)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중국 정상 및 ADB 참여 예정.

다음으로 아세안의 통합노력에 대한 지지 및 협력이 필요하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및 아세안투자지대(AIA) 출범, e-ASEAN,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등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협력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對아세안 협력의지 실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SEAN+3 회의를 한、중、일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동 회의가 한、중、일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우리의 주최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특히 ASEAN+3 공동 협력사업[8]에 대한 참여와 지원 의사를 밝히고, 기승인[9] 혹은 신규제안 사업[10]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의사 표명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旣제안사업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의 대아세안 협력의지를 밝히고 아울러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세안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추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

8) ASEAN+3 협력사업은 아세안 중 2개 국가 및 한、중、일 중 2개국가 승인 필요 (2002. 10 제2차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

9) 아세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제안국 : 말련) 등 7개 사업.

10) 동아시아 경쟁정책 정보교환(제안국 : 필리핀) 등 10개 사업.

<참고 1> 주요 제안사업 현황

제안연도	사 업 명	경 과
1998	EAVG 창설	ㅇ1999. 10 제1차 회의(창설), 2001. 5 제5차 회의(종료) ㅇ2001. 11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 EAVG 보고서 제출
1999	업종별 민간협의회	ㅇ2000. 5 제1차 대표간사회의 개최(서울) ㅇ정보통신부문 민간협의회 설립 관련 - 2001. 7 정보통신 민간협의회 주관기관회의 개최(서울) - 2001. 11 베트남, 캄보디아 주관기관과의 협의 - 2002. 10 ASEAN+3 정보통신민간협의회 총회 개최 예정 ㅇ관광부문 민간협의회 설립 관련 - 2001. 6 관광부문 민간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협의회 개최 - 2001. 10 아세안관광 포럼과의 연계 제안
2000	EASG 설치	ㅇ2001. 3 제1차 회의(창설) ㅇEAVG 제안 57개 협력사업 중 단기조치 17개, 중·장기조치 9개 선정 완료 ㅇ2002. 11 제6차 ASEAN+3 정상회의시 보고서 제출 예정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ㅇ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른 역내 통화 Swap 협정 체결 - 한국 : 일본(완료, 50억 불+20억 불), 중국(계약절차 진행중, 20억 불), 태국(계약절차 진행중, 10억 불), 필리핀·말련(협의중) - 일본 : 한국(완료, 50+20억 불), 태국(완료, 30억 불), 필리핀(완료, 30억 불), 말련(완료, 10억 불), 중국(완료, 30억 불), 싱가포르·인니(협의중) - 중국 : 태국(완료, 20억 불), 일본(완료, 30억 불), 한국(계약절차 진행중, 20억 불), 말련·필리핀(협의 착수) ㅇ투기성 단기자본 감시체제 마련 - 한국·일본·태국·베트남·필리핀·인니·브루나이 등 7개국이 현재 양자간 자본이동자료 교환에 합의하고 실무협의 추진중 ㅇ외환위기 예측방안 마련 - 현재 ADB 주관으로 역내 외환위기 조기경보체제 기본모델 개발 추진(2001. 12 태국에서 1차 워크샵 개최)

제안연도	사 업 명	경 과
2000	동아시아 특별협력 기금 설치	ㅇ2001. 7 기본계획 확정(한、중、일 3국이 1,500만 불 기금 조성) ㅇ기금설치에 대한 일、중의 소극적 반응으로 우리나라 주도로 중국, 일본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프로젝트 베이스로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키로 결정 ㅇ2001. 11 제5차 ASEAN+3 정상회의시 특별기금의 조성보다는 특별프로그램 설치에 의한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한다는 의미의 '동아시아 특별협력 이니셔티브' 제안
	동아시아 IT 인턴십 프로그램	ㅇ2002년 중 100명의 동아시아 연수생을 초청, IT분야 기초교육 및 민간기업에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 전자상거래, 광전송기술, 초고속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 컨텐츠, 네트워킹 시스템 등 5개 과정에 20명씩 연수 실시 - 사업규모 : 50만 불(KOICA 예산)
	아세안국가 표준 및 적합판정 능력 배양	ㅇ2001. 10 ASEAN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에 대한 연수실시(한국표준과학연구원) ㅇ2002. 10 ASEAN 국제표준화 적합성평가 구축에 대한 연수실시 예정(산자부 기술표준원)
	동아시아 백신프로그램	ㅇ2002년도 KOICA 무상협력사업 예산 기확보(50만 불) ㅇ2002. 5 사업대상국에 KOICA 사전조사단 파견 ㅇ2002. 8 국제백신연구소측과 협의, 사업내용 확정 예정

제안연도	사 업 명	경 과
2001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ㅇEASG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동아시아 포럼、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상 포함 동아시아 지역협력 방안 중점 검토중
	동아시아 특별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ㅇ2002년도 사업예산 100만불 기확보(정통부, 일반회계) ㅇ2002. 5 동 사업실시 계획(안)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회의 개최 - IT 인프라 구축 지원 및 IT 교육 훈련 실시(신형 컴퓨터 100대 지원 계획) - IT 기술、정책자문 제공 -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ASEAN+3 정보통신민간협의회 운영 지원
	후발 아세안 국가에 컴퓨터 300대 제공	ㅇ2002년 KOICA 무상협력사업에 반영(30만 불 旣확보)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에 국별로 신형 컴퓨터 75대 지원 계획 - '동아시아 특별협력 이니셔티브'상의 신형컴퓨터 100대 공여 계획과의 사전 조율 필요 ㅇ2002. 5 노동부가 베트남에 중고컴퓨터 700대 旣기증
	ASEAN+3 중소기업 통합 정보 검색사이트 구축	ㅇ2002. 6. 3 현재 일본을 제외한 12개국 focal point 지정 ㅇ2002. 6. 11~12 서울에서 W/G 회의 개최 예정
	중견 아세안 고위관리 초청, 연수	ㅇ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되 예산은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 2002. 4 제6차 한、아세안 Dialogue시 ASEAN 측에 예산 지원 요청

<참고 2>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

1. AEM+3 승인사업

일련번호	사 업 명	제 안 국
1	아세안국가 적합성 평가능력 배양	한 국
2	아세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인 초청 연수)	말레이시아, 미얀마
3	환경보호기술연수 프로그램	중 국
4	IT 기술자 공동자격기준 이니셔티브	일 본
5	메콩강유역 인적개발사업	태 국
6	아세안 인공위성 영상자료 공동 활용	태 국
7	e-학습이니셔티브	일 본

2. 신규 및 미승인사업(검토 요망)

일련 번호	사 업 명	제안국	한、중、일 지지국
1	ASEAN+3 산업협력 연구사업	인도네시아	한국
2	아세안 영상회의 체제 구축	말레이지아	
3	동아시아 경쟁정책 정보 교환	필리핀	
4	동아시아 유기농검사 인증기구 설립	필리핀	
5	ASEAN+3 연예산업 진흥	태 국	일본
6	아세안 식량안보 정보 시스템 구축	태 국	한국
7	2003 아시아 인큐베이터사업	태 국	일본
8	다중언어 번역기 개발	태 국	
9	아세안 기술센터 건립	베트남	
10	중고컴퓨터 기증사업	캄보디아	한、중、일

<참고 3> EASG 활동 경과

1. EASG 작업 경과

- ㅇ 2001. 3. 17 제1차 EASG 회의(호치민 시티)에서 정식 발족
  - ASEAN+3 SOM 대표 및 ASEAN 사무국장(14명)으로 구성
  - 한국과 ASEAN 의장국을 공동조정국으로 선출

- ㅇ 5. 19 제2차 EASG 회의(하노이)에서 EASG 운영지침 채택 및 2001년도 작업계획 합의

- ㅇ 7. 22 제1차 실무그룹회의(베트남 하노이)

- ㅇ 7. 24 ASEAN+3 외무장관 회의(하노이)에 EASG 추진현황 보고

- ㅇ 8. 20 제3차 EASG 회의(브루나이)

- ㅇ 9. 7 제2차 실무그룹회의(서울)
  - EAVG 보고서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작업 개시
  - 협력조치목록선정 방식에 관한 의견교환
  - 동아시아 정상회의 연구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교환

- ㅇ 10. 12 제4차 EASG 회의(브루나이)

- ㅇ 11. 5 ASEAN+3 정상회의(브루나이)
  - EAVG보고서 권고사항 중 3대 중점 연구과제로 "동아시아포럼창설", "동아시아정상회의출범" 및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창설" 제안

- ㅇ 2002. 1. 11. 제3차 실무그룹회의(브루나이)

- ㅇ 4. 18. 제4차 실무그룹회의(말레이시아)
  - EAVG 보고서 중 협력조치 선정완료
  - WG 차원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논의

ㅇ 5. 18. 제5차 EASG회의(브루나이)
- EAVG 보고서 중 협력조치 승인
- EASG 차원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논의

ㅇ 6. 28. 제5차 실무그룹회의 회의(일본)
- 일、싱가포르 작성, 동아시아정상회의 연구 paper 논의
- EASG 최종보고서 초안 논의

ㅇ 8. 29. 제6차 EASG 실무그룹회의(서울)
- EASG 최종보고서 초안 확정
  、금번 정상회의시 배포 예정

2. EASG 운영지침

가. 목표 및 원칙

ㅇ ASEAN과 한、중、일간 협력 심화、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ㅇ EASG 활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 ASEAN+3 process내 포함
- 점진적、단계적 접근방식
- 개방된 지역주의 지향
- 동아시아 정체성(common regional identity) 함양
- 역내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노력

나. 임무

ㅇ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보고서를 검토(assess), 우선 순위가 높고 실현 용이한 구체적 협력조치 선정

ㅇ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 추진방안 연구(explore)

다. 조직 및 운영

(구성)

ㅇ ASEAN+3 SOM 대표와 ASEAN 사무국장으로 구성

ㅇ EASG 업무보좌를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 (Working Group) 설치

(의장국 및 조정국)

ㅇ ASEAN과 한·중·일 각 1국을 공동의장국(Co-Chairmen) 및 공동조정국(Co-Coordinators)으로 선정

- ASEAN 측은 ASEAN 의장국, 한·중·일 측은 한국이 수임

(활동시한 및 보고서)

ㅇ EASG는 2002년 ASEAN+3 정상회의시까지 활동

ㅇ 2001년 정상회의에 중간보고서, 2002년 정상회의에 최종보고서 제출

※ EASG에서 선정한 협력조치 목록(26개)

		구 체 내 용
단기협력 조치	경제적 협력	ㅇ동아시아 Business Council 설립 ㅇ최빈개도국에 대한 GSP 지위 및 특혜조치 부여 ㅇFDI 확대 위한 투자유인환경조성 ㅇ동아시아 투자정보 네트워크 설립 ㅇ성장지대 내 자원·인프라 공동개발, 금융지원 및 민간참여 장려 ㅇ인프라, IT, 인적자원개발 등 3개 우선분야의 지원 및 협력 제공 ㅇ기술이전 및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협력 - FDI 및 전략적 제휴 ㅇ인터넷 access 확대를 위한 인터넷 IT 공동개발 및 통신 인프라 구축
	정치적 협력	ㅇ해적, 마약 거래 등 새로운 안보문제에 있어서의 협력메커니즘 강화 ㅇ동아시아 think tanks 네트워크 구축
	사회·문화·교육 협력	ㅇ빈곤감소 프로그램 수립 ㅇ기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조 ㅇ포괄적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이행 ㅇ동아시아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문화, 교육기관과의 공동 노력 ㅇ예술,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증진 및 전문가 교류 ㅇ역내 동아시아 연구 증진
	제도적 협력	ㅇ동아시아포럼 설립
중·장기 협력 조치	경제적 협력	ㅇ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설립 ㅇ중소기업에 의한 투자 확대 ㅇ아세안 투자지대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투자지대 설립
	금융협력	ㅇ동아시아 차입협정 또는 동아시아 통화기금 설립 ㅇ금융안정 및 경제개발을 위하여 역내 긴밀한 환율공조체제 추진
	환경,에너지 협력	ㅇ에너지 정책 및 전략 기본방향 수립 및 범 ASEAN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 형태의 이행계획 수립 ㅇ동아시아 전역에서의 해양환경협력 증진
	사회, 문화, 교육협력	ㅇ시민참여 및 국가-시민 partnership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공조에 있어서 NGO와 긴밀한 협력
	제도적 협력	ㅇ동아시아 정상회의

Ⅱ. 아시아 ·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현황과 대응과제

1.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 APEC과 한국 : 현황과 과제 / 김상겸
· APEC의 향후 발전방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 지혜양

2. 아 · 태경제협력 민간부문 이니셔티브 : ABAC, PBEC, PECC / 이은석

APEC과 한국 : 현황과 과제

김 상 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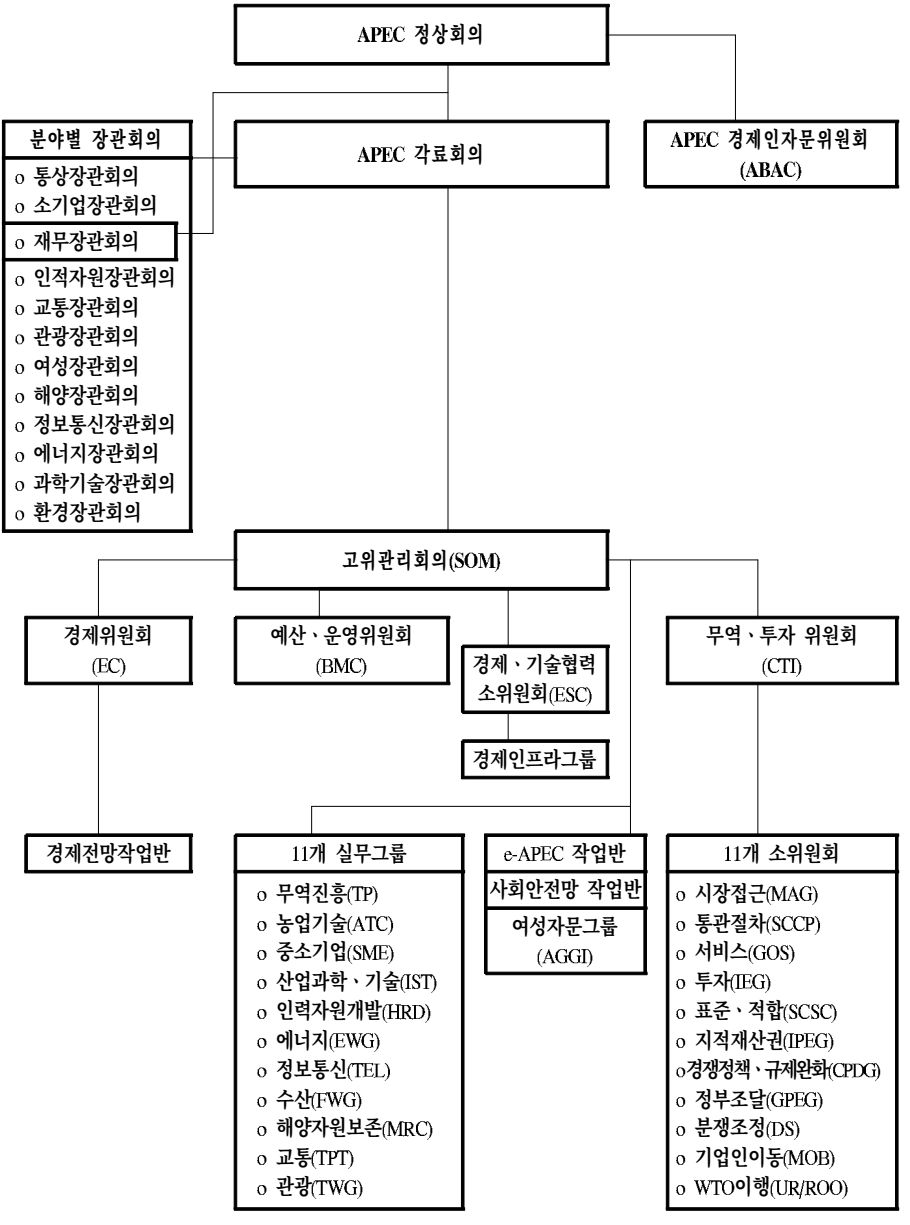
Ⅰ. APEC의 현황
Ⅱ. APEC의 활동평가
Ⅲ. 우리나라와 APEC
Ⅳ. APEC에 대한 향후 대응

Ⅰ. APEC의 현황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 13년간 APEC은 상설 사무국의 설치, 1993년 이후 비공식 지도자회의의 연례개최, 회원국의 확대 등을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우선 창설 초기에 각료회의를 지원하는 고위 관리회의(SOM : Senior Official Meeting)와 7개 실무그룹(Working Group)[1] 중심의 APEC 조직은 의제의 확대와 전문성 심화에 따라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1) 1990년부터 무역 및 투자데이터 검토,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에너지, 수산, 해양자원 보존 등 7개 실무그룹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역내 경제협력체의 골격을 갖추게 되었음.

<그림 1> APEC 조직도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o 통상장관회의
o 소기업장관회의
o 재무장관회의
o 인적자원장관회의
o 교통장관회의
o 관광장관회의
o 여성장관회의
o 해양장관회의
o 정보통신장관회의
o 에너지장관회의
o 과학기술장관회의
o 환경장관회의
APEC 각료회의
APEC 경제인자문위원회 (ABAC)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 (EC)
예산·운영위원회 (BMC)
경제·기술협력 소위원회(ESC)
무역·투자 위원회 (CTI)
경제인프라그룹
경제전망작업반
11개 실무그룹
o 무역진흥(TP)
o 농업기술(ATC)
o 중소기업(SME)
o 산업과학·기술(IST)
o 인력자원개발(HRD)
o 에너지(EWG)
o 정보통신(TEL)
o 수산(FWG)
o 해양자원보존(MRC)
o 교통(TPT)
o 관광(TWG)
e-APEC 작업반
사회안전망 작업반
여성자문그룹 (AGGI)
11개 소위원회
o 시장접근(MAG)
o 통관절차(SCCP)
o 서비스(GOS)
o 투자(IEG)
o 표준·적합(SCSC)
o 지적재산권(IPEG)
o경쟁정책·규제완화(CPDG)
o 정부조달(GPEG)
o 분쟁조정(DS)
o 기업인이동(MOB)
o WTO이행(UR/ROO)

<표 1> APEC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 (2001년 기준)

회원국명	국토면적 (1000㎢)	인구 (100만 명)	명목 GDP (10억US$)	1인당 GDP (1US$)	경제성장률 (%)	수출 (10억US$)	수입 (10억US$)
(1) 동북아							
한국	99.2	47.7	422.7	8,866.3	3.3	149.8	141.1
일본	377.8	127.1	4,147.9	32,634.7	-0.4	404.9	359.5
중국	9,561.0	1,276.3	1,157.4	906.9	7.3	316.6	258.8
홍콩	1.1	6.7	161.5	24,016.9	0.2	175.4	204.3
대만	36.0	22.3	282.2	12,666.3	-1.9	122.9	107.2
러시아	17,075.4	144.2	319.3	2213.7	5.0	82.5	36.9
(2) ASEAN							
싱가포르	0.6	4.1	85.6	20,731.7	-1.9	121.7	116.0
태국	513.1	62.4	114.7	1,837.3	1.8	65.1	62.1
말레이시아	329.8	23.8	87.5	3,678.9	0.4	89.2	75.4
인도네시아	1,904.6	213.8	145.3	679.8	3.3	66.0	37.0
필리핀	300.0	77.0	71.3	925.4	3.2	34.6	35.7
브루나이	5.8	0.3	5.3	15,804.5	3.3	3.3	1.3
베트남	331.7	79.5	32.7	411.7	6.8	14.2	16.8
(3) 대양주							
호주	7,741.2	19.6	357.3	18,227.1	2.4	63.4	60.8
뉴질랜드	270.5	3.9	49.5	12,763.7	1.8	13.5	13.4
파푸아뉴기니	462.8	5.0	3.6	717.5	-2.5	2.7	1.0
(4) NAFTA							
미국	9,629.1	278.2	10,208.1	36,695.8	1.2	730.9	1,180.1
캐나다	9,970.6	31.0	705.2	22,728.8	1.5	258.1	225.4
멕시코	1,958.2	101.1	610.9	6,045.1	-0.3	145.8	140.7
(5) 남미							
칠레	756.6	15.4	66.5	4,314.4	2.8	18.0	17.2
페루	1,285.2	26.1	54.0	2,073.5	0.2	6.5	6.2
APEC전체(A)	62,610.3	2,565.6	19,088.7	10,901.9	1.28	2,885.2	3,096.8
세계전체(B)	133,805.8	6,103.3	30,964.5	5,073.4	1.1	6,178.3	6,486.7
역내비중(A/B:%)	46.8	42.0	61.6			46.7	47.7

주: 1) 국토면적은 World Bank, 수출입은 IMF, 그 외에는 DRI-WEFA 자료를 이용.
단, 대만 수출입 자료는 대만 재정부통계처의 진출국무역통계월보 자료를 이용.
2) 명목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은 잠정치임.

자료: DRI-WEFA, World Overview, August 2002.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June 2002.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2.
대만 재정부통계처, 진출국무역통계월보, 2002. 4.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SC), 예산 및 운영위원회(BMC) 등 4개 위원회와 11개 실무그룹과 작업반으로 확대되는 기구의 확대가 이루어졌다.[2)]

회원국 규모 면에서 APEC은 1989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6개 ASEAN 회원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총 12개국으로 출범한 이후 1991년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의 중화경제권, 1993년에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페루, 베트남, 러시아 등 3개국이 가입함에 따라 2002년 현재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정부간 공식 경협기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의 확대는 대륙·지역 간 안배 및 선·개도국 간의 균형적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내부결속력 약화에 따른 경협 논의의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수반하였다. 실제로 출범초기부터 APEC의 경협 논의는 경제기술협력(Ecotech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라는 양대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의 역내 금융위기와 21세기의 세계화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APEC의 의제가 금융·거시협력은 물론 신경제 체제아래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 및 사회문제(여성, 질병, 소외계층)까지 확대됨으로써 급속한 양적 팽창에 따른 회의운영상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경제협력 논의 진전을 위해 1998년 이후 10년간 새로운 회원국 가입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I. APEC의 활동평가

1. APEC의 성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EC은 조직과 기능의 확대를 통해 아·태

2) <그림 1> 내용 참조.

지역을 연계하는 정부간의 경제협력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촉진과 세계경제 발전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① 역동적이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1989년 이후 10년간 역내 수출과 투자는 각각 113%와 20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선·개도국 간 TILF와 Ecotech 양대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협력기구로서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3] 특히 지난 10년간 시장적 필요성에 의해 역내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APEC의 경제규모는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01년 현재 세계전체 GDP와 교역량에서 각각 61.6%와 4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EU 및 기타 지역협력체를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다.[4] 이와 같은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APEC은 아·태지역 무역·투자 기회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역내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② 다자간 무역체제 발전을 촉진

APEC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를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본원칙 아래서 경제협력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다지무역 체제 강화에 관한 APEC의 기본방향은, 첫째 APEC의 자유화 논의는 WTO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하며(WTO consistent), 둘째 다른 지역협정과는 달리 역내 경제협력(자유화 및 원활화 포함)의 혜택이 역외지역에도 동일하게 제

3) APEC, *Open Economies Delivering to People: APEC's Decade of Progress*, 2000.

4) 같은 해 EU의 GDP 및 총교역이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9%와 34.5%임.

공되어야 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표방과 일치된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APEC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이 배타적 경제블록 형성이 아닌 개방적인 다자체제의 강화를 목표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서 지난 13년간 9차례의 정상회의와 13차례의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APEC 지도자들과 각료들을 통해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역내외 국가에 전달함으로써, UR협상의 성공적 체결과 DDA의 합의 도출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APEC은 투자 및 경쟁정책분야의 비구속 원칙 정립, 투자 및 서비스분야의 Menu of Option 정립, 정보기술협정(ITA) 이니셔티브의 WTO 수용 등 다자차원에서 제기·합의하기 힘든 통상관련 규범 제정 및 시범사업 수행을 선도하는 포럼 역할 담당하고 있다.

③ 경제기술협력(Ecotech) 논의 확대

APEC은 협력 초기단계부터 경제·기술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하여왔으며, 경제·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목적은 회원국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에 기여하여왔다. 특히 APEC에서의 협력은 선·후진국 간의 공여자·수혜자 간의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인적자원 개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육성, 경제인프라 강화, 미래를 위한 기술활용, 환경친화적 지속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경제 확산에 따른 역내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와 micro finance 관련 협력방안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④ 공무원 교육 확대에 기여

회원국의 정치·경제·문화의 다양성 및 자발적 참여를 인정하는 신축적인 협력을 중시하는 APEC은, WTO나 여타 무역자유화 논의와는 달리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원합의제 방식과 자발적 참여 원칙 아래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공동의 정책개발과 대화 확대를 위한 협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회원국 공무원들에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 능력과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forum으로 활용되고 있다.

⑤ 역내 거시·금융협력 확대

1997년 7월 태국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비롯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역내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 및 금융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에서는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동향, 테러금융 및 자금세탁 방지, 금융·재정 개혁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Voluntary Action Plan(VAP) Part II Policy Dialogue, 생명보험·연기금 규제개편, 역내 기업지배구조 강화, 파산법, 민영화 포럼,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 전자금융거래제도, APEC 미래경제지도자 Think-Tank 등의 공동과제를 추진중이다.

⑥ 민간부문과의 동반자 관계 강화

APEC은 출범당시부터 회원국 정부간의 협의체적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협력의 실질적 수혜자인 민간·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996년부터는 정상회의에 대한 상설 자문기구로서 APEC 기업인자문회의(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창설하는 등 민간기업 부문의 APEC process 참여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5)]

2. APEC 활동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EC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여 규모면에서 세계최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구와 조직의 확대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APEC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APEC의 협력형태가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의체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APEC의 의사결정 방식이 전원합의제,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자유화 추진 논의가 불가능하다. 특히 EVSL의 실패 이후 APEC TILF와 Ecotech 활동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APEC의 모멘텀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둘째, APEC 회원국들은 경제규모, 역사·문화 등에 있어 다른 경제협력체보다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APEC 경제협력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synergy를 극대화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방법·속도 및 경제기술협력 추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고르 목표 이행방안은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 등 중요한 자유화 및 국제경제 이슈에 대한 APEC의 합의 도출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APEC은 아·태지역 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5) ABAC은 매년 APEC 정상들에게 보내는 ABAC 권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APEC 정상들에게 제출하고 있음. 특히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건의서가 보다 현실성 있는 건의가 될 수 있도록 APEC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하여 APEC 통상, 재무, 환경, 교통, 에너지, 중소기업 및 인력개발 장관회의를 비롯한 분야별 장관회의에 ABAC 의장 또는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역내 기업의 관심 사항이 APEC의 전반적인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한다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 방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북아, 서반구, 아세안, 대양주 등 지역차원의 RTA, FTA 결성 확대 움직임과 아·태 공동체 결성과의 관계설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넷째, APEC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의 강구보다 정상·각료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규모 및 가시적 성과에 크게 집착하는 관료집단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PEC의 지나친 관료화는 cost-benefit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상들의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굴을 위한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으로 APEC의 protocol 및 이벤트 심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이 결과 APEC 활동이 보고르 목표 이행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같은 APEC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Major Committment 없이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APEC 사무국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조정능력의 결여, APEC 기구 확대에 따른 fora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성이 APEC의 시장개방과 경제협력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3년간 APEC 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APEC의 최종수혜자인 기업들의 APEC 참여와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APEC의 홍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II. 우리나라와 APEC

1. 우리나라의 APEC 활동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체일 뿐 아니

라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 일본, 중국 등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APEC 활동을 통한 우리의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과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 기준 한국의 총수출 중 대APEC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US1,056.5억 달러로 우리나라 총수출의 70.2%가 APEC 회원국 시장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6] 한편 같은해 한국의 총수입 중 APEC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7.3%로 액수로는 US94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교역 면에서도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존도는 총외국인투자의 62%, 총해외투자의 67.1%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표 3참조). 따라서 APEC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북미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아시아, 대양주 및 남미지역 시장과의 교역 확대모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APEC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제질서 개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대외교역 및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외교 전략차원에서도 APEC은 통상마찰을 지역적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조율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방적·양자주의적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는 유용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 주변 4강과 정기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협력 확대는 물론 전략적 연계를 통해 정치·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APEC을 통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정상차원의 정책공조가 원활히 전개되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지원 아래 북한의 APEC 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0년 개최된 제8차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APEC 참여를 제안하여 APEC 정상들의 적극적인

6) 같은 해 우리나라의 대EU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수출은 각각 US,1962억 달러(13.0%)와 US252억 달러(16.7%)를 기록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와 APEC 국가와의 무역통계(2001년 기준)

(단위: 백만US$)

회원국명		수출	수입	교역규모	무역수지
(1) 동북아		50,921	47,394	98,315	3,526
	일본	16,506	26,633	43,139	-10,128
	중국	18,190	13,303	31,493	4,888
	홍콩	9,452	1,228	10,679	8,224
	대만	5,835	4,301	10,137	1,534
	러시아	938	1,929	2,868	-991
(2) ASEAN		16,119	15,857	31,976	262
	싱가포르	4,080	3,011	7,091	1,068
	태국	1,848	1,589	3,437	259
	말레이시아	2,628	4,126	6,754	-1,498
	인도네시아	3,280	4,474	7,753	-1,194
	필리핀	2,535	1,819	4,354	716
	브루나이	16	452	469	-436
	베트남	1,732	386	2,117	1,346
(3) 대양주		2,455	6,364	8,818	-3,909
	호주	2,173	5,534	7,707	-3,361
	뉴질랜드	272	743	1,015	-471
	파푸아뉴기니	9	86	96	-77
(4) NAFTA		35,395	24,464	59,859	10,931
	미국	31,211	22,376	53,587	8,835
	캐나다	2,036	1,821	3,857	214
	멕시코	2,149	267	2,416	1,882
(5) 남미		760	812	1,573	-52
	칠레	573	696	1,269	-124
	페루	188	116	304	72
APEC총계(A)		105,650	94,891	200,541	10,758
전체총계(B)		150,439	141,098	291,537	9,341
역내비중(A/B:%)		70.2	67.3	68.8	

주: 1) 수출입실적은 통관실적임.

2) 본 데이터는 집계시점 및 집계방법의 차이로 인해 IMF의 DOTS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KOTIS [Online] Available: http://www.kotis.net.

<표 3> 우리나라와 APEC 국가와의 투자통계

(단위: 건, 백만US$)

회원국명		APEC의 對한국 투자		한국의 對APEC 투자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1) 동북아		7,125	14,342	7,699	6,903
	일본	4,135	11,312	520	549
	중국	2,381	223	6,588	4,763
	홍콩	326	2,102	418	1,347
	대만	166	694	62	103
	러시아	117	12	111	141
(2) ASEAN		528	8,241	1,880	3,655
	싱가포르	221	2,348	124	537
	태국	15	7	192	495
	말레이시아	265	5,867	222	327
	인도네시아	14	14	490	1,086
	필리핀	13	4	543	526
	브루나이	N.A.	N.A.	4	2
	베트남	N.A.	N.A.	305	683
(3) 대양주		113	434	326	522
	호주	95	416	189	432
	뉴질랜드	18	18	124	29
	파푸아뉴기니	N.A.	N.A.	13	61
(4) NAFTA		3,340	24,461	3,004	8,771
	미국	3,176	21,799	2,789	8,167
	캐나다	162	2,658	149	381
	멕시코	2	3	66	226
(5) 남미		N.A.	N.A.	35	150
	칠레	N.A.	N.A.	20	25
	페루	N.A.	N.A.	15	125
APEC총계(A)		11,106	47,478	12,944	20,000
전체총계(B)		14,358	76,607	14,612	29,797
역내비중(A/B:%)		77.4	62.0	88.6	67.1

주: 1) 對한국 투자(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2001년 12월까지의 누계치임.
2)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 7월까지 순투자의 누계치임.

자료: 1) 산업자원부(2001. 12), 외국인투자동향.
2)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Online]
Available:http://www.koreaexim.go.kr/web/oeis/M04/main.html

지지를 획득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APEC을 교두보로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개방화를 유도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APEC에 대한 기여

우리나라는 1989년 호주와 함께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경제협력 공식기구인 APEC의 창설을 주도한 이후 우리의 중간자적인 입장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APEC의 opinion leader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우선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APEC의 창설 및 제도적 발전기반 강화에 기여하여왔으며,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호칭 및 참가대표 자격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홍콩, 대만 등 3개 중화경제의 APEC 가입을 성사시키는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한편, APEC의 원칙, 목적, 운영방식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APEC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자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1993년 제5차 각료회의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원칙" 추진과정에서 선·개도 간의 입장 조율에 앞장서는 중간자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 합의 성사에 기여한 바 있으며, 1997년부터 추진된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도국의 참여를 선도하고 APEC을 통한 제도개혁 및 자유화의 실천의지를 부각시킨 바 있다. 한편, 1998년 개최된 제6차 정상회의(말레이시아)시 역내 투자흐름의 활성화와 투자제도 개선 홍보를 통한 개별 회원국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APEC투자마트 개최를 제안하고, 1999년 6월 서울에서 제1차 투자마트를 개최한 바 있다.[7]

7) 제2차 투자마트는 2001년 중국에서, 제3차는 2002년 러시아에서 개최되었으며, 2003년에는 태국이 제3차 투자마트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표 4> APEC 정상회의 관련 우리측 주요성과

정상회의	주요성과
1차(93)	우리 정상이 최초로 참석한 다자 정상회의
2차(94)	우리나라의 무역투자 자유화 목표년도를 2002년으로 설정
3차(95)	오사카 행동지침(OAA)에서 신축성 조항 확보, 민감한 부문의 단계적 자유화 추진 근거 확보
4차(96)	인적자원 개발 계획에의 적극적인 참여 입장 홍보
5차(97)	아·태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을 APEC 시범사업으로 제의
6차(98)	지식기반산업 육성, 중소기업육성, 아·태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 확대 등을 제의, 정상들의 지지 획득
7차(99)	경제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방안 제시(2002. 3 APEC Seoul Forum 개최 제의)
8차(00)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협력방안 제안(인터넷 청년봉사단, 사회안전망 특별작업반 설치 등)
9차(01)	반테러 사태 논의와 경제적 대응 방안 논의 선도,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사업 제안

경제기술협력(Ecotech)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제5차 각료회의시 회원국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위한 차세대 프로그램(Next generation Program)을 제안하였으며, 회원국간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마트 개최를 성사시키고, 199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정보통신각료회의에서 아·태 정보통신망(APII : 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설치를 제안하여 역내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Ecotech 활동은 globalization의 심화에 따른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95년 제3차 정상회의시 미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APEC 교육재단 활동과 제6차 정상회의시 우리 대통령이 제안한 지식기반산업

(KBE) 활성화 사업이 Cyber 교육협력사업과 APEC 지식정보 웹사이트(KCH) 구축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Ecotech 활동은 정보·디지털 혁명 혜택의 확산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994년 초대 무역투자위원회(CTI) 초대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임한 이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APEC의 주요 fora를 담당하여 intellectual contribution을 통한 APEC 발전을 이끌고 있다.

<표 5> 2001~2002년 중 APEC 의장직 수행 현황

Fora	성 명	직 책	수임기간
경제위원회 (EC)	안 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01. 1~2002. 12 재선임 (2003. 1~2004. 12)
투자전문가 그룹 (IEG)	박 태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2000. 3~2002. 8
인력개발 실무그룹 (HRD WG)	이 정택	한국직능개발연구원 연구실장	2000. 6~2002. 8
사회안전망 Task Force	정 경배	(전임)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원장	2001. 1~2001. 12

IV. APEC에 대한 향후 대응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경제적으로는 APEC의 자유화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APEC의 자발적 자유화를 통한 우리 제도·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협력기구이다. 또한 NAFTA, ASEAN, CER 등의 자유무역협정 당사국과 연계 강화를 통해 APEC을 우리나라

FTA 추진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한편,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확보에 기여하는 통상전략 실천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EVSL의 합의도출 실패 이후 자유화 추진 분야에서 APEC의 역할은 많이 축소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통상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시장개방효과가 미약한 APEC의 자유화조치에도 매우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APEC을 통한 우리의 통상정책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APEC 모멘텀 지속을 위한 leadership 발휘와 함께 APEC을 우리의 통상정책 목표 달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① APEC 자유화 비전의 재정립 선도

보고르 목표가 짧게는 8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고르 목표를 포함한 APEC 비전의 재정립과 구체적 추진일정 작업 착수는 APEC 모멘텀 확보에 필수요소이다. 우리나라는 보고르 목표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과 community building에 기여할 수 있는 roadmap을 제시하여 APEC의 credibility와 relevancy 회복을 선도함으로써, APEC의 비전 재정립에 기여함은 물론 개방된 통상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Roadmap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 있어야 하나 협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APEC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비현실적인 제안은 APEC의 credibility를 해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package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② Ecotech 분야의 주도권 확보

Ecotech 활성화를 위해 선·개도국 간의 교량역할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습득한 개발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APEC에서의

발언권과 조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입지를 십분 발휘하여 역내 정보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APEC 개도국의 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투자·수출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③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2005년 의장국 수임에 대비하여 향후 2년간의 APEC 활동의 결실을 2005년 성과사업화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정상회의, 각료회의, SOM회의 및 각종 fora가 연중 개최됨에 따라 학계, 민간과 정부의 중지를 모아 APEC의 제2의 발전을 위한 Theme 개발을 조속히 착수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APEC을 우리의 21세기 국제경제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수행과 함께 중장기 경제성장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을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의 해로 삼아, Retreat시 APEC 정상들의 보고르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하는 방안도 2005년 APEC의 주요 성과로 검토·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④ APEC 내 한국의 신뢰성 제고

KBE 권고안 이행, APEC Cyber 교육협력사업, 장애인 및 여성과 IT 관련 사업, 사회안전망사업, APII 관련사업, APEC 교육재단 관련사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기제안 사업의 이행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APEC 내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APEC process는 bottom-up process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fora의 충분한 논의와 검정을 거쳐 투명성 있는 절차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8]

8) 향후 우리가 APEC에 제안할 사업은 기존 추진사업과 package해서 synergy 효과를 발휘하면서 2005년 APEC theme과 합치가 필요함.

⑤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APEC 관련 resource가 정상회의 관련 행사성 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아ㆍ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APEC 본연의 과제 추진 및 이행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APEC이 TILF, Ecotech 중심에서 New Economy, Knowledge는 물론 환경, 보건, 여성 및 정치 이슈로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논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전담부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APEC 외교역량 격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차적으로 APEC process와 재무장관 process를 전담하는 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APEC 전략 강구가 필요하며, APEC 관련 resource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요망된다. 특히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정부, 민간, 학계를 연계하여 APEC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의 확충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겸,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연구 01-05, 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2001.

김상겸, 『APEC 주요국의 교역구조와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정책자 96-1, 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1996.

대만 재정부통계처, 진출국무역통계월보, 2002. 4.

유장희, 『APEC과 신국제질서』, 나남신서, 서울, 1995.

APEC, *Open Economies Delivering to People: APEC's Decade of Progress*, 2000.

Australian Foreign Affairs and Trade, "APEC Progress on Tariffs: Implication for a New Agenda," A report presented for the APEC MRT Meeting Sahanghai China 2001.

DRI-WEFA, World Overview, August 2002.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June 2002.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2.

APEC의 향후 발전방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지 혜 양

(주 미국대사관 일등서기관)

목 차

Ⅰ. APEC의 향후 추진방향
Ⅱ. 한국의 입장과 전략
Ⅲ. 2002년 APEC 정상회의 전망과 한국의 대책

Ⅰ. APEC의 향후 추진방향

1. 개 요

지난 2001년 상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상해합의(Shanghai Accord), e-APEC Strategy 보고서, 반테러 선언문 등의 세가지 주요한 문서가 채택되었다. 이 중에서 상해합의(Shanghai Accord) 및 e-APEC Strategy 보고서에는 APEC의 향후 추진 방향이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상해 합의는 올해로 출범 13년째를 맞는 APEC의 재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것인 만큼 향후 APEC 논의의 중심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 9.11테러의 여파로 반테러 정상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9.11 테러로 인한 잠정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며 경제협력체라는 APEC의 기본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반테러와 관련된 의제가 중·장기적으로는 APEC 활동의 중심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상해 합의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2001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상해 합의를 통해 APEC 회원국들이 1) APEC 비젼의 확대, 2) 보고르 목표 실현방안의 명료화, 3) 이행 메카니즘의 강화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APEC 비젼의 확대

세계화와 신경제의 도래로 인한 기회와 도전의 시기를 맞아 APEC의 주요 활동 축인 TILF(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와 Ecotech(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합해 추진함으로써 APEC 회원국 모두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TILF와 Ecotech의 통합 문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서 현재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APEC 비젼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재무장관 프로세스의 목표를 APEC의 넓은 틀 내에 포함시켜 지역내 번영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의 건전한 운용과 안정된 금융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2년 SOM I에 재무 차관회의 대표가 참가하여 SOM 프로세스와 재무장관 프로세스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고 현재 양 프로세스의 대표의 교차 참가 방안이 추진 중이

다. 또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APEC 사무국의 재무장관 프로세스 지원, 웹사이트간 연결 등의 다양한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 보고르 목표 실현 방안의 명료화

APEC을 실질적인 지역협력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고르 목표의 실현 방안을 분야별로 구체적 제시를 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① OAA(Osaka Action Agenda)의 확대·개선 ② 개척자 방안(Pathfinder Approach)의 추진 ③ 신경제(New Economy)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정책의 발굴과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④ 무역원활화 원칙을 위한 구체적 행동방안 발굴 ⑤ 투명성 원칙의 이행 등이 제시되었다.

OAA(Osaka Action Agenda)는 보고르 목표 달성의 상세 계획으로 19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계획,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양대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OAA의 확대 및 개선이 제안되어 지난 2001년 OAA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e-APEC 전략 이행을 통한 신경제의 발전, 시장기능강화 등의 세계 경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OAA의 확대 및 개선이 추진 중이다.

이때 논의된 방안 중 독특한 것이 개척자 방안(Pathfinder Approach)이다. APEC은 컨센서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안된 Pathfinder Approach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여타 회원국보다 적극적인 몇 개 회원국이 중심이 되어 별도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Pathfinder Approach로 호주가 사전입국심사제(APP)를 제안하여 check-in을 할 때 입국정보를 미리 입력해 사전에 입국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제를 내놓은 상태이고 추가 사업 발굴 논의가 진행중이다.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을 반영하고 신경제(New Economy)의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정책을 발견하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신경제를 위한 무역정책'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이 제시한 신경제를 위한 무역정책 template를 통해 회원국간 정보교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무역정책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 회원국이 자료를 제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한국 등 대다수 국가가 무역정책 정보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무역원활화 원칙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발굴하고 향후 5년간 무역거래 비용의 5%를 절감하자는 의제도 역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의 무역원활화 논의는 효과 산출에 대한 방법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도국의 능력배양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명성 원칙의 이행을 위해서 회원국들은 APEC에서 기합의된 제반 투명성 원칙들을 이행토록 노력하되 각 회원국의 특수 상황 및 IAP 진전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미국이 현재 각 Fora에 산재되어 있는 투명성 원칙들을 하나로 통합한 APEC 투명성 합의(Transparency Accord)를 제안한 상태이며 오는 2002년 10월 멕시코 정상회의시 채택을 목표로 미국안에 대한 각회원국내 검토 및 회원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3) 이행 메카니즘의 강화

APEC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PEC의 논의 사항을 어떻게 이행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상해 합의에서 이런 APEC의 이행 메카니즘을 강화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행 메카니즘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 장치를 마련·강화하고 있는데 IAP(Individual Action Plan) 검토회의(Peer Review)가 강화되고 있고 보고르 목표 추진 성과에 대한 mid-term stocktaking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일본이 주도하여 IAP Peer Review 절차를 개선·실시중이고, 2005년 한국이 정상회의 개최

시 mid-term stocktaking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Ecotech 부문에서도 EAP(Ecotech Action Plan) 개발 확대, ESC(Ecotech Sub-Committee) 역할 강화, Ecotech과 TILF간 유사한 활동의 통합, OAA part II 보완,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등을 통한 이행 메카니즘의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래서 EAP 평가지표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며, APEC 사무국 및 호주의 주도로 APEC회원국에 의한 WTO 능력배양 활동을 종합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3. APEC 운용 개선

APEC은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산만하고 중복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APEC 운용 개선 방안이 올해 많이 논의되고 있다.

1) APEC 합동 각료회의 개선 추진

SOM 회의와 각료회의가 차별성이 적어, 각료급에서 진정한 의미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료회의를 SOM 회의와 차별화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각료회의 직전에 개최되던 Informal SOM을 Concluding SOM으로 전환하고, 각료회의 제출 보고서를 작성해 각료회의에서는 몇 개의 이슈에만 집중하여 논의하고, 각료회의 기간 중 (총2일) 양자회담 등의 비공식 활동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자는 등의 개선 방안이 호주에 의해 제시되었다. 또한 비경제 잇슈 논의를 위해 외무장관들간의 별도 논의 세션을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 정상들과 ABAC과의 대화 개선 추진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ABAC과의 대화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양자간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대화 방식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ABAC 보고서의 작성 시기를 앞당겨 통상장관회의에 미리 보고·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고 형식적인 정상과의 대화 방식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APEC 사무국의 역할 강화

APEC 사무국의 직원들은 각 나라에서 파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임기가 제각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각국 파견 직원의 자질 향상 및 증원, 부분적인 상주직원 고용, 사무국내 행정업무전담 고위직(General Manager) 신설, 사무국의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홍보담당 직원 고용, APEC 웹사이트의 update 강화 등 APEC 사무국의 역할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II. 한국의 입장과 전략

1. 중·장기 활동 방향

중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APEC 활동의 중심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주최에 맞추어져 있다. 2005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 중 4강이 모두 참가하는 첫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APEC 의장국이 되는 2005년을 2010년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해

가 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보고르 목표 달성에 APEC 활동의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 관련 해서도 활용할 여지가 큰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출시장 확대 등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 조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북한의 경제개혁 개방 유도 지원 등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APEC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고르 목표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통해서 수출과 투자를 증진시켜야 하며, APEC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간능력배양, 경제협력 기금 마련 등의 필요 수단을 마련하여 APEC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APEC의 수혜자인 기업, 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도출해 냄으로서 APEC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겠다.

무엇보다 2005년 APEC회의 주최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APEC 준비기획단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APEC 정상회의를 참가함에 있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아·태지역내 유일한 협력체인 APEC에 우리가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주제(consistent theme)를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여타 지역협력체인 ASEAN+3, ASEM과도 참가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화있게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주요 APEC 주제(theme) 및 기여 방안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고, 추진해야 할 주요 APEC 주제 및 기여 방안으로 다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는 APEC이 세계경제 둔화와 같은 역내 주요 거시경제 현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APEC 재무장관 프로세스 참가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국제금융제도 개선 논의, 자본흐름 안정화, 국내 개혁 및 구조조정, 나아가 G-8과 유사하게 회원국간 경제정책 조율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APEC의 위상 제고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APEC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APEC 사무국 기능 강화, APEC Fora간 연계강화, APEC 활동 대민 홍보, 기업 참여 강화 등의 APEC 운영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APEC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전자/IT산업 강국으로서 역내 IT 수요 및 활용 확대를 통한 IT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IT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상제안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모아져 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이니셔티브를 내고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즉 전자정부 구현, 여성 IT 능력의 배양, 장애인 권익 향상, 사이버 교육 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 및 해소'를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IT 산업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 IT 능력배양 사업은 멕시코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는 등 그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넷째 EAVG를 통해 ASEAN+3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FTA 제안을 바탕으로 APEC에서의 FTA와 보고르 목표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이 원활이 진전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장으로 APEC이 활용될 수 있게 논의를 끌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WTO가 무역자유화의 주요 도구로써 기능한다면, APEC은 최소한 역내 무역원활화의 주요 장으로 기능하여 두 기

구간 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우리나라가 정상제안으로 내놓은 사업인 APEC 교육재단등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APEC내 여타국의 교육관련 사업 특히 IT 관련 프로젝트를 교육재단을 통해 이행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같은 주변국가와 경제격차가 심한 국가의 개방 및 개혁을 지원할 수 있는 APEC의 역할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APEC의 경제성과가 APEC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 역내 유일한 지역협력체인 APEC 역할이라고 생각되며, 이런 차원에서 비회원국의 참여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2002년 APEC 정상회의 전망과 한국의 대책

1. 정상회의의 주제 및 의제

금년(2002년)도 제10차 정상회의는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 로스까보스(Los Cabos)에서 개최된다. 금번 정상회의와 연계하여서는 SOM(10.21-22), ABAC 회의(10.22-26), 각료회의(10.23-24), CEO Summit(10.23-25)이 열릴 예정이다.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Theme)는 "경제성장·개발을 위한 협력의 이익확대 - 비전 이행(Expanding the Benefits of Cooper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 Implementing the Vision)"으로서 올해 APEC 의장국인 멕시코는 새로운 의제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APEC 목적과 비젼의 실천 및 이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제(Priority)는 ① 경제성장을

진작하는 무역·투자·금융정책의 이행증진 ② 개발의 이익확보를 위한 능력형성 및 중소기업 micro-기업 활성화 ③ 청소년·여성 등의 참여확대,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 및 APEC의 기능 증진 등이 있다.

정상회의의 의제(Agenda)는 주최국인 멕시코가 곧 확정할 예정인데 다음과 같은 의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 세계 및 지역경제 현황 및 회복 방안
  - WTO/DDA 협상 진전에의 의제 표명
  - 다자무역체제 강화에서 APEC의 실질적 기여로 위상 제고
o 상해합의 및 e-APEC 전략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 투명성 합의(Transparency Accord) 채택, 무역과 디지털 경제 합의(Agreement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 Pathfinder 사업채택(사전 승객심사, 개정 Kyoto협정 이행 등)
o 반테러 성명이행 방안

2002년 상해 반테러 성명에 이어 ① 역내 교역안전(STAR Initiative : Secure Trade in the APEC Region) ② 테러자금 ③ 사이버 보안 등 반테러 활동 구체 이행

o 중소기업 육성 등 능력형성 등 Ecotech 강화
o APEC 운영개선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확대

2. 우리나라의 기본 대응방향

올해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기본 대응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혁과 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 즉 시장경제체제의 강화와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서만이 세계화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APEC의 적극적 기

여와 상해합의의 효과적인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점증하는 보호무역적인 동향에 우려를 표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의 활성화를 통한 무역장벽 제거가 필요함을 역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범세계적 경제불안/침체 타개를 위한 APEC의 역할 촉구 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역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근 APEC의 노력을 평가하고, APEC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세째 정보사회 구현에 APEC의 기여가 필요함을 피력한다. 무엇보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을 위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신경제하에서 전개되는 정보통신 기술발달의 과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성하고 인력을 배양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며 정보 격차의 축소 완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넷째 APEC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한다.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APEC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에서의 보고르 목표 중간 점검시에 APEC의 활성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특히 APEC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민간(community)에 구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활동 개발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섯째 2005년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주최하기 위한 준비위 및 기획단 발족에 대해 언급하고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준비위는 2002년 말, 기획단은 2003년 상반기 발족을 추진중이다.

마지막으로 정상제안 사업의 성과를 거양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사이버 교육, 사회안전망, 교육재단 등과 같은 APEC 사업과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아·태경제협력 민간부문 이니셔티브 : ABAC, PBEC, PECC

이 은 석
(KOPEC 기획총괄팀장)

목 차

Ⅰ. 머리말
Ⅱ.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Ⅲ.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Ⅳ.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Ⅴ. 맺음말
<참고> 아·태지역 민간경제협력기구

Ⅰ. 머리말

1989년 정부간 경제협력채널인 APEC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민간부문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미 몇몇 협력기구들이 형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67년 창설된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와 1980년 설립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러한 민간협력기구들은 APEC의 출범에 상당

한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부간 채널인 APEC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협력의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는 1996년 설립된 이후 매년 APEC 정상회의에 권고안을 제출하며 기업인들의 직접적인 정책제안채널로서 활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간협력기구들은 각국 정상들이 매년 회동하는 APEC에 비해 인지도나 관심도 면에서 낮을 뿐 아니라, APEC이 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체임에 비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순수 민간기구라는 점에서 국가간 정책결정에 있어 큰 영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PEC을 위시하여 역내 다양한 협력채널이 창설되면서 예전에 비해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민간외교 채널로서 APEC 등 정부채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기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아·태경제협력외교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이러한 민간기구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1. ABAC의 구성과 주요 활동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는 APEC 회원국의 저명 기업인들로 구성된 APEC 정상 자문기구로서, 정부간 기구인 APEC에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정상들의 합의에 따라 1996년 출범되었다. ABAC은 APEC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3인의 위원[1]으로 구성되어 21개 회원국에서 총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ABAC은 매년 3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에 관한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집약, 매년 APEC 정상회의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ABAC의 주요 논의사항은 전년도 정상회의 선언내용, 주요 국제경제 이슈, 해당년도 ABAC 의장국의 주요 관심사항 등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의장국이 회의조직과 의제선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관계로 의장국의 관심사항과 경제여건에 따라 논의내용이 상당폭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2] 의장은 당해년도 APEC 개최국에서 자동적으로 맡게 되며, 2명의 부의장은 전년도 의장국과 다음해 의장국에서 담당한다.

ABAC의 주요 기능은 매년 APEC 정상회의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 민간기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ABAC은 APEC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등 주요 APEC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개진하며, ABAC 의장 명의로 APEC 관련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ABAC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한다. ABAC의 활동은 APEC의 합의나 ABAC 건의사항에 대한 APEC 및 회원국의 이행사항을 검토하는 1개의 상설위원회(Action Plan Monitoring Committee)와 구체적인 주제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현재 기업활동 여건 개선(Business Facilitation Task Force), 금융(Finance Task Force), 기술관련 조치 (Technology Task Force) 등 3개 분야에서 작업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SME Caucus)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1) 각 국별 3명의 위원 중 1명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2) ABAC은 필리핀 마닐라에 상설사무국을 두고 있으나 회비징수 등 단순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회의조직과 운영은 해당년도의 의장국에서 실행한다.

2. ABAC의 최근 동향 및 문제점

2002년도 ABAC의 논의동향을 보면, 의장국인 멕시코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영세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금융, 조세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2001년도에 이어 국제적 이슈인 테러 대응조치와 동 조치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ABAC이 2002년 보고서를 통해 APEC 정상에 제안한 사항들은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ABAC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APEC내 추진이 미미한 6가지 사항[3]에 대해 APEC이 즉시 논의를 재개해줄 것과, ABAC 건의사항에 대한 APEC의 검토 및 이행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APEC 사무국이 ABAC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결과와 조치 등을 ABA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BAC 활동에 대한 APEC 회원국과 사무국의 관심이 저조하여 ABAC 건의사항이 APEC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거 ABAC의 연례보고서는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제출되어 APEC 정상 및 각료들이 동 보고서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음해에는 의장국의 교체에 따라 APEC 논의사항이 새로이 설정됨으로써 보고서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해서 ABAC은 2002년부터 매년 5월경 개최되는 2차 정기회의에서 연례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APEC 사무국 및 APEC 2차 고위관료회의, 통상장관회의 등에 사전 제출하여, 10월 중 발표되는 APEC 정상선언에 포함되도

3) 회원국 내 표준화 제도 확립, APEC Food System 정립, 회원국 정부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정보제공 계획수립, IMF 및 World Bank의 Observance of Standard and Codes(ROSCs)와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s(FSAPs) 보고서에 대한 회원국 참가, 채권시장 고위 감독기구의 설립, 지적재산권(IPR) 강화와 이를 위한 정보수집센터 설립 등이다.

록 변경하여 실행중이다.

매년 APEC 정상회의 시기에 열리는 ABAC과 APEC 정상과의 대화가 형식에 치우쳐 관료주의화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ABAC의 요구사항들은 APEC지역 내 민간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는 ABAC에 적극적인 회원국들의 영향력에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ABAC 위원들이 민간기업의 입장보다는 각 회원국의 정부입장에 보다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APEC 회원국들이 정부간 제안하기 껄끄러운 사업을 정상회의에 요구하는 통로로 ABAC을 활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것은 현재 ABAC 위원을 회원국 정부가 선정하거나 ABAC 사무국이 정부지원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으로 단기간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BAC은 APEC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APEC을 통해 논의사항을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PEC Means Business"라는 APEC의 기본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APEC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BAC 내부적으로도 기업인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반영한 성공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APEC의 공식기구로서의 역할 재정립에 꾸준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ABAC 한국위원회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 한국 측 ABAC 위원들이 매년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1997년 5월 ABAC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2005년 우리나라가 APEC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ABAC 한국위원회는 자동적으로 2004년 부의장국, 2005년 의장국, 2006년 부의장국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ABAC 위원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대성그룹 김

영훈 회장, 중소기업 대표로서 캐드랜드의 윤재준 사장이 맡고 있으며, AB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BAC 한국위원회의 역할은 APEC 여타 회원국가에서 우리 기업이 겪게되는 애로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APEC을 통해 해결하도록 정부와 ABAC 위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ABAC 참여는 현재까지 위원의 개인적 활동에 그쳐 의제설정과 주제토론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참여가 미흡한 편이다. 무엇보다도 ABAC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인지도가 대단히 낮아 ABAC을 국내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부터 현재현 위원이 ABAC 기술분과위원회 의장을 맡아 정보통신, 생명공학(유전자변형 물질 등), 정보격차(digital divide) 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게 되면서 점차 한국의 ABAC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전경련 차원에서도 ABAC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의 입장조율 강화,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02년에는 5월 제2차 ABAC 회의에 앞서 ABAC 위원들이 외교통상부 조정관 등과 의견조율을 거쳤으며, 제2차 시드니 ABAC 회의결과를 즉시 외교부에 전달함으로써 직후에 개최된 APEC 고위관료회의 및 통상장관회의에 대응토록 조치한 바 있다.

ABAC 위원들이 한국 기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ABAC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ABAC 한국위원회가 회원사를 포함하는 관련 기업에 ABAC 논의사항을 수시로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체계화하여 ABAC 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지원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AC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는 기본적으로 위원에 선정된 기업인이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경제와 한국경제에 밝아 스스로 활발히 활동

하여 ABAC 내 영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2005년 APEC 유치에 따라 ABAC 한국위원회는 이제 2005년 ABAC 의제 설정과 ABAC 총회 및 CEO Summit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 ABAC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2005년 의장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3년 초에는 ABAC 한국위원회가 의장 지원을 위한 사무국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현재 AB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거나 별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4] 아울러 2005년 이전에 한국이 ABAC 회의를 유치하여 2005년 총회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비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III.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1. PBEC의 구성과 주요 활동

태평양경제협의회는 1967년 4월 은행가, 경제인 및 기업대표들의 주도로 창설된 역내 최고(最古)의 순수 민간협력기구로서, 태평양지역의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출범당시 5개 국가(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의 회원국위원회로 구성되었던 PBEC

4) 대부분의 회원국은 ABAC 활동을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은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현재 AB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경련 아주협력팀의 ABAC 담당 인원은 2명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회원국위원회의 수준(평균 5명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 2002년 현재 20개[5] 정회원국으로 확대되어, 1천여 개 다국적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다자경제포럼으로 발전하여 역내 민간경제계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PBEC은 자유기업체제의 유지 및 강화, 기업경영환경의 개선, 새로운 사업기회 확대, 기업인 상호간 친교 및 유대 강화, 역내 교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행정장벽의 축소,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및 이용 활성화, 환경보호를 위한 균형적인 경제개발의 추구 등을 기본 활동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PBEC은 매년 700여 명 이상의 역내 기업인들과 각국 정상, 정부고위관료 등이 참가하는 연차총회(IGM : International General Meeting)를 개최한다. 연차총회를 통해 PBEC은 태평양지역 내 민간경제인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뿐 아니라, 역내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기업간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한다. 제1차 총회는 1968년 호주의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으며, 2002년까지 35차에 걸쳐 연차총회를 개최하였다. 제 36차 회의는 2003년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PBEC의 주요 활동 중 대정부 건의 및 정책제안은 민간경제계의 대변자라는 PBEC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BEC은 기업과 정부 간 중개자 역할을 함으로써 역내 경제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측에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며, 매년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아ㆍ태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함으로써 민간 측의 정책 제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PBEC은 주요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역내 교역 및 투자 자유화 등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현재 해외투자, 전자상거래 / 기술, 환경, 서

5) 20개 정회원국 :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미국.

비스, 농산물, 사업개발, 투명성, 반덤핑 등 8개 실무위원회가 활동중이다. 환경이나 지적재산권, 그리고 금융서비스 등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2. PBEC의 위상변화와 대응과제

PBEC은 아·태지역 내 가장 오래된 다자경제포럼으로 민간경제계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역내 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한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정립해왔다. 특히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경제의 개방화를 선도하고 1990년대 초 중국, 러시아 등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개방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간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 간 정보교류 포럼으로서 PBEC의 활용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역내 다양한 전문포럼이 설립되면서, 아·태지역 내 중심 경제포럼으로서 PBEC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일본이 선도하던 기존 PBEC 구도에서 중국이 핵심 경제권으로 등장하면서 미국과 일본 기업의 참여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의 성장둔화로 발언권과 참여의욕이 급속하게 저하되어 회원국간 균형 있는 참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PBEC이 민간경제인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보다는 국가를 대신한 정책 대결의 장으로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역내 특정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유사 포럼이 다수 등장하면서 PBEC의 역할과 존재이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아·태지역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정보교환의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PBEC과 같은 종합경제포럼보다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포럼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6년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ABAC이 창설됨에 따라 PBEC의 정책제안 기능이 ABAC과 중복되면서, 민간경제계의 대변자로서 역할이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와이에 위치한 PBEC 국제사무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상변화에 대응하여 PBEC은 민간경제계의 대변자로서 정책제안과 정보교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역내 타 연구기관과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등 PBEC 개혁과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덧붙여 글로벌 시대의 기업 수요에 부응한 의제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아·태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APEC의 노력에 부응하여 APEC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PBEC은 역내 경제협력의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PBEC 한국위원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대외 개방을 시도하면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사업기회 확대와 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태지역 유일한 민간국제기구인 PBEC에 가입하여 우리 경제의 대외 개방 채널과 민간통상외교의 훈련장으로 활용해왔다.

1982년 5월 설립된 PBEC 한국위원회는 1984년 제17차 캐나다 밴쿠버 총회에서 PBEC 정회원국으로 승인된 이후 1986년 제19차 총회와 1993년 제26차 PBE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1994년 9월 3대 PBEC 한국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1998년 산티아고 총회에서 PBEC의 주요 현안을 심의 및 결정하는 PBEC 전략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999년 홍콩총회에서 PBEC 국제부회장으로, 2001년 하

와이 총회에서는 PBEC 수석국제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한국이 PBEC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2002년 5월, 제35차 말레이시아 총회에서 조석래 회장이 PBEC 국제회장으로 피선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회장국으로서 2003년 5월 제36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02년 현재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이건산업 박영주 회장이 맡고 있으며, 설립 당시부터 PBEC 한국위원회의 사무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부에서 유치하고 있다.

PBEC 한국위원회의 주요 활동목표는, 첫째 아·태지역 민간경제협력의 창구로서 한국경제계와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및 증진에 기여하고, 둘째 역내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부관계 부처에 전달하는 정책건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PBEC 정책의사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PBEC이 아·태지역의 영향력 있는 민간경제협력단체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며, 넷째 역내 경제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PBEC내에서 한국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하는 것이다. 즉 PBEC 한국위원회는 한국 민간경제계의 의견을 PBEC이라는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경영 환경 개선창구로서 활용하며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 및 투자장벽을 해소하는 데 있어 PBEC을 활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제회장국으로서 중국 및 러시아의 PBEC 가입을 유도하는 등 사회주의경제권 접촉 창구로서 활용한 바 있는 우리나라는, 2002년 다시 한 번 PBEC 국제회장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PBEC의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03년 PBEC 서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채널로서 PBEC을 활용하며

아·태지역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한국경제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IV.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1. PECC의 구성과 주요 활동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는 아·태지역 정부, 학계, 업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역내 경제현안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민간협력기구이다. 1980년 9월 호주에서 창립된 이후 PECC는 아·태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실현하며 체계적인 기구로 발전하였으며, 점차 그 가입국이 증가하여 2002년 현재 25개 회원국[6]과 2개 기관회원[7]이 참여하고 있다. PECC는 아·태 경제협력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정부참여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후일 APEC 출범에 큰 역할을 하였고, 현재까지 APEC의 공식 옵서버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PECC는 아·태지역 경제발전 도모를 위한 협력과 정책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포럼을 기본 목표로, 3자 참여 원칙(Tripartite Participation)에 따라 정부, 학계, 업계 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역내 경제협

6)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남태평양포럼, 대만, 태국, 미국, 베트남 등 23개 정회원국과 프랑스(태평양연안 프랑스령 국가)와 몽고 등 2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7)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와 태평양경제협의회(PBEC)가 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력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지향적인 연구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금융, 능력개발 등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각 회원국과 APEC 등의 국제포럼에 정책자료로 제공한다. 현재 PECC의 활동프로그램은 크게 무역, 금융 및 지역공동체 등 3대 포럼(Forum)으로 구성되며, 각 포럼 산하에 2~3개의 연구그룹(Task Force) 및 프로젝트(Project)를 두어 각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경제전망 구조 및 전망, 태평양식량체제 등 3개 아웃룩(Outlook) 연구그룹은 독립적인 연구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여 정책자료로서 배포하고 있다.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민간의 국제교류와 참여를 주도하는 것도 PECC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1989년 정부간 협력기구인 APEC의 출범에 상당히 기여한 바 있는 PECC은 이후 APEC의 유일한 민간 옵서버로서, APEC 무역자유화의 주요 원칙 등 APEC 정책의제를 개발하는 Think Tank의 역할을 해왔으며 APEC의 주요 연구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ABAC, PBEC 등의 역내 협력기구, 또한 APEC Study Centers, Asia-Pacific Rim Universities Network, PAFTAD 등 학계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국제기구, 즉 UN 산하기구, ADB, World Bank, OECD 등의 활동에 분야별로 참여하고 있다.

PECC의 활동성과는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General Meeting)에서 종합ㆍ발표된다. PECC 총회는 회원국 정상 또는 장관급 고위관리, 기업총수, 저명한 학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종합학술세미나[8]로서 2년 동안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거쳐 PECC

8) 지난 2001년 11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14차 PECC 총회에는 1천여 명의 재계, 학계 및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02-2003년간 PECC의 활동주제는 "Securing the Future"로서 2003년 11월에 브루나이에서 제15차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의 향후 연구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 2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는 PECC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연구프로그램을 감독·평가하게 된다. PECC 국제사무국[9]은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도와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회원국 활동을 지원하며, 홍보 및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PECC의 최근 동향과 향후 과제

1980년대 태평양지역 경제협력논의를 주도해온 PECC는 1990년대 들어 APEC의 확대와 여타 유사한 국제 및 지역 경제기구의 설립으로 인해 각 회원국의 지원과 관심이 저하되면서 그 역할과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되었다. 이에 PECC 상임위원회는 설립 20년이 지난 PECC를 활성화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공동체로서의 모멘텀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4월 대련에서 특별위원회(PECC Vision Group)를 구성하여 PECC의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PECC의 위상제고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PECC 구조개편

2000년 10월 자카르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비전그룹 보고서는 당시까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PECC 산하 연구그룹[10]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PECC 신뢰회복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연구주제 개발, 효과적인 재원 확보 및 분배 방안 모색 등에 중점을 둔 구조개혁 모델을

9)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사무총장(David Parsons)을 비롯한 직원 7명이 상근하고 있다.

10) 당시 16개 이상 활동하던 연구그룹은 forum, network, project group, task force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PECC 전체 Work Program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연구분야가 중복될 우려가 있었다.

제시하였다. 2001년 4월 교토 상임위원회는 비전그룹의 3차 보고서에 따라 당시 17개이던 PECC 연구그룹을 무역, 금융, 지역공동체의 3대 포럼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New PECC Structure"를 승인하였고, 2001년 11월 홍콩 총회를 통해 새로운 구조의 PECC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ECC 산하 연구그룹들은 Forum, Task Force, Project 등 일관된 명칭을 사용하며 전략적이고 방향성 있는 구조로 재편되었다. 2002-2003년간 PECC는 무역, 금융, 지역공동체 등 3대 포럼을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럼별 관련 APEC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활동을 보고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관련 다양한 국제기구 및 포럼과의 연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3대 포럼 중심의 구조조정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무역, 금융 분야 이외에 과거 안정적인 재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던 기존 연구그룹들은 PECC 연구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회원국의 참여 및 국내적 재정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EC 분야별 작업반과 PECC 연구그룹간 관계가 불분명해져 다양한 APEC 포라와의 채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따라서 3대 포럼 외 기존의 활발한 연구그룹들의 네트워크 유지와 지속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경제협력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연구주제 개발과 안정적인 연구기금 확보를 위해 PECC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지도층과 국제사무국의 역할 강화

PECC는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국제사무국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연구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지도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PECC 상임위원회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PECC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 상임위원회가 단순히 활동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아·태지역 경제, 정치, 안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핵심이슈에 대해 회원국간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여야 한다는 인식 아래, 2002년 4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을 가능한 배제하고 retreat를 열어 위원간 실질적인 논의를 유도하였다. 호주의 저명한 언론인인 Greg Sheridan을 초청하여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색적인 시도를 하는 한편, PECC가 역내 경제협력에 있어 좀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이끌어내도록 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실제적으로 PECC 연구프로그램을 조직·감독하는 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PECC의 활동방향 제시라는 원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PECC 국제사무국 역시 단순한 행정지원 업무가 아닌 연구프로젝트의 개발과 홍보, 연구기금조성 등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국제사무국 구조개혁은 PECC 연구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와 각 Forum 및 Task Force 활동 지원, APEC, PBEC, ABAC, ADB, World Bank 등 외부기구와의 협력적 관계 정립 및 강화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구조를 개편하고, PECC Fund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PECC Fund는 회원국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미국, 러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베트남, 몽고 등의 회원국은 재정악화로 분담금을 체납중이며, 많은 동남아시아 회원국들 역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연구프로그램 개발에 참여를 독려하는 등 각 회원국이 자력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PECC 차원의 지속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 역내 네트워크 강화 : "Networking the Networks"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회원구성과 목적이 유사한 기구들이 많이 설립되면서 회원들간에 PECC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PECC는 학계와 재계, 정부라는 독특한 3자 참여 구도와 20년 이상 유지해온 폭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역내 다양한 기구간 네트워크 구축에 PEC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Networking the Networks"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내에서 PECC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동 전략은 APEC, PBEC, ABAC, ADB, World Bank 등 현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UN 산하 지역기구, WTO, ASEM, ASEAN 등 다양한 성격의 지역기구과도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연구사업과 정책제안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PECC은 다양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성과 성격 면에서 비슷한 기구인 PBEC과의 연계 또는 통합을 고려하자는 제안을 바탕으로 PBEC과의 협력강화와 향후 통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회원국위원회 중 캐나다, 미국, 대만 등은 이미 국내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을 검토중인 회원국도 상당수이다. PECC·PBEC 국내위원회의 통합운영은 독자적인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국의 자금확보와 대아시아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의 경우 2001년 말에 ABAC, PECC, PBEC을 통합한 Asia-Pacific Foundation of Canada를 설립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PECC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회원국마다 두 조직의 성격과 상황이 다름을 고려하여, PECC과 PBEC 양 기구 차원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네트워크의 강화는 외부기구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참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ECC 조직개편에 따라 회원국위원회의 인

적네트워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나 연구소에 부속되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는 동남아시아 및 남아메리카 국가의 위원회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PECC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3. KOPEC의 역할과 과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PECC의 한국위원회로서, PECC의 결성 움직임과 정부의 적극적 태평양외교에 부응하여 1981년 6월 정부, 업계 및 학계의 인사들을 위원으로 하는 3원적 구성의 원칙하에 조직되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PECC 창립 상임위원 및 KOPEC 회장을 역임(1984~1993)하였으며, 김기환 대사가 1993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설립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내에 사무국을 두었으나, 1991년 1월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으로 사무국을 이전하였으며 사무국장을 비롯 4인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KOPEC은 PECC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이에 따른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활동으로 한다. 1985년 제4차 PECC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1996년에는 PECC 무역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KOPEC은 PECC의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데 있어 꾸준히 지도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2001년 새로 개편된 PECC 구조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금융포럼(Finance Forum)의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회원국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금융분야 연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APEC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정부의 APEC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APEC 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실시, 비즈니스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정부

의 APEC 외교성과를 민간에 홍보하고, APEC 정상제안사업에 대한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ABAC 및 PBEC 한국위원회와의 유대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KOPEC은 회장단의 개인역량에 의존, 위원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후속 업무가 따르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 및 국내 3대 경제단체, 각 정부출연 연구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KOPEC의 사업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input을 제공하기에는 이사기관들의 관심과 협조가 저조한 편이다. PECC 연구프로그램에 맞추어 조직되는 국내 분과위원회도 현재로서는 형식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으로, PECC의 분야별 활동에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사무국 역시 과거 국제회의 참석자들의 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등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KOPEC 자체의 사업을 창의적으로 확대·개발할 필요가 있다.

KOPEC은 회장단의 풍부한 경험과 지도력,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볼 때 그 활용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간외교의 장이라 할 수 있는 PECC에서 꾸준히 지도력을 발휘하여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뿐 아니라, PECC 사업을 전략적으로 국내 연구사업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OPEC이 의장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ECC 금융포럼(Finance Forum)은 동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우리나라로서는 활용해야 할 좋은 기회이다. 금융포럼을 통해 역내 금융협력에 대한 토론과 정책제안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APEC, PBEC, ABAC 등 분산되어 있는 아·태지역 경제협력기구들의 국내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KOPEC이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2003년 PBEC 총회, 2005년 APEC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의 아·태경제협력외교에 있어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의제개발을 위한 토론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업계와의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아·태경제협력 논의에 있어 KOPEC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두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연구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1970-1980년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논의를 주도해 온 민간부문은 아·태경제협력기구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까지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APEC의 창설로 민간기구의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되었고, 설립 초기에 아·태경제협력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APEC마저 뚜렷한 성과 없이 관심과 기대를 잃어가면서 민간협력기구의 위상이 더욱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각 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회원들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재원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민감한 외교사안을 다루는 정부간 협의기구와 달리 민간협의체는 보다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용적일 수 있다. 모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현안을 다루고 있는 협력기구들로서 APEC과 위에서 살펴본 민간기구들은 결국 관심사항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구간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활동이 중복되면서 초래되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민간기구간 유대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 활동도 한정된 재원과 인력, 저조한 관심으로 인해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ABAC이나

PBEC, PECC 모두 우리나라의 아·태경제협력외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국내적으로 APEC과 각 민간기구의 활동 사이에 연계가 미흡하고 공동의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2003년 PBEC 총회, 2005년 ABAC 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교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아·태경제협력외교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각 사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구 국내위원회 간에 적절한 역할분담과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참고> 아·태지역 민간경제협력기구

	ABAC	PBEC	PECC
명 칭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태평양경제협의회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회원국 구성	21개 APEC 회원국	20개 회원국	25개 회원국 및 2개 기관회원
설립연도	1996년	1967년	1980년
성 격	국가가 선정한 3인의 기업인대표가 참여	기업인 회원이 참여	업계와 학계 인사 및 정부관료가 개인자격으로 참여
주요회의	1년 3회 정기회의와 APEC 정상과의 대화	매년 5월 총회개최	2년마다 총회개최, 연 2회 상임·운영위원회 개최
2002년 의장국	멕시코 (APEC 개최국)	한국	브루나이(~2003년)
국제 사무국	필리핀 마닐라	미국 하와이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abaconline.org	www.pbec.org	www.pecc.net
한국위회 사무국	전경련 국제부 아주협력팀	전경련 국제부 미주협력팀	사단법인으로서 독립된 사무국 운영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2002년 10월 18일 인쇄
2002년 10월 23일 발행

발 행 인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장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발 행 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240~3 FAX: 3460-12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오롬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정책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지역연구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지역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 무역투자정책실,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북아팀, 동서남아팀, 미주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동북아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 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 · 단기 연구보고서, 월간『KIEP세계경제』, 반년간『대외경제연구』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ep.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1179 / FAX : 3460-1144
URL: http//www.kiep.go.kr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240~3 FAX: 3460-12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1179 FAX: 3460-1144

KOPEC / KIEP